

연구총서 99-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 우 영

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국가사회주의의 몰락과 식량난으로 상징되는 대내외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원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비교적 효율적인 사회통제체제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최근의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사회통제체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 사회통제체제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원인을 따져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북한 사회통제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여 보았다.

북한이 현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통제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통제를 다루는 기존 연구들도 북한의 사회통제체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분석 주안점은 물리적 억압에 의한 사회통제 그리고 이를 통한 주민들의 강제적 통합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체제를 북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가치개입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 북한체제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통제체제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사회통합능력을 평가하는 토대가 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 양상을 전망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1. 사회통제의 개념과 사례

사회통제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규범에 반하는 사회 구성원의 일탈행위(deviant behavior)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제재를 의미한다.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사회통제 개념은 일탈적 행위가 사회규범을 침해함으로써 사회규범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어느 사회체제든지 본질적으로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통제 기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류사회학에서는 사회통제가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통합이라는 순기능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비판적 사회학에서는 사회통제를 지배·피비재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회통제를 사회적 억압이며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한 기제로서 인식한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집단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사회통제의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확보된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구소련의 경우 정보기관 등을 활용한 물리적 통제와 더불어 각종 선전·선동을 통한 정치적 설득이 사회통제의 중요한 기제였다.

2. 북한사회통제의 특성

북한사회통제체제는 크게 물리적 통제와 사회적·이념적 통제로 나뉘어 진다. 물리적 통제는 당을 통한 조직적 통제와 각종 물리적 억압기구를 통한 통제, 사법제도 및 독특한 처벌제도 등을 의미한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당의 선도적 역할을 중시하는 북

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이 사회의 각 하위체계까지 조직화되어 있으며, 일선 행정조직이나 사업장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물리적 통제를 담당하는 억압기구인 인민무력성, 국가정보보위부, 사회안전성,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이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당의 지배 즉, 정치적 간섭을 정당화하고 있다. 공개처형과 정치수용소로 대변되는 강력한 처벌제도도 북한의 물리적 통제기제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사상적 통제의 핵심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대치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할 것을 강제한다. 사상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중앙집중적인 정치사회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와 매스미디어 그리고 각종 회의가 정치사회화의 주요 매체가 된다. 집단별 차별적 대우를 특성으로 하는 북한의 계층정책은 중요한 사회적 통제기제이다. 배급제도도 또 다른 사회통제기제이다. 배급제도는 모든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체제에 의존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을 제한하고, 조직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른 사회통제기제의 수단이기도 하다.

3. 북한 사회통제의 변화

북한의 범죄나 일탈행위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죄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범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러 가지 범죄 가운데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일탈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정치범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정치사범, 경제사범, 뇌물범죄, 인신침해사범, 그리고 청소년범죄 등으로 나뉘어진다.

강력한 사회통제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난과 식량위기로 경제사범과 부정부패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범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초적인 사회규칙을 어기는 일탈행위도 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범죄가 조직화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최근 일탈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사회통제정책도 부분적으로 변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인민투력성의 보위사령부가 담당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체제에 핵심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차별적 보상을 강화하고,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사상적 통제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계층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시장을 일부 허용하는 등 사회변화에 적응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4. 북한 사회통제의 평가

북한의 사회통제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 사회통제는 기본적으로 김일성 유일체제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사회통제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사회통제 기제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넷째, 사회통제기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기제들의 유기적 관계가 일사불란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물리적 억압기구간의 분업화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여섯째, 각종 처벌의 종류와 수준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사회통제체제가 효율적이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분단구조라는 사회적 환경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전쟁의 경험은 대결의식을 심화시켜 강력한 물리적 억압, 차별적 보상체계, 사상통제의 강화 등

을 정당화하였다. 또한 김일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와 전통주의의 유효 적절한 활용도 사회통제체제의 효율성 제고에 일조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통제는 지금까지 비교적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사회통제체제의 변화는 식량난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문제와 개인적인 수준의 일탈행위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북한 사회통제체제가 급격히 약화될 것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차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불만과 같은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제의 개혁 없이 대증(對症) 치료적인 차원에서 사회통제체제를 변혁하는 것만으로 각종 사회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사회체제의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사회통제를 강화하거나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회통제기제를 변혁하고자 한다면, 단기간의 사회통합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사회통제의 개념과 사례	4
1. 사회통제의 개념	4
2. 사회주의 국가 사회통제의 사례: 구소련의 경우	14
III. 북한사회통제의 특성	23
1. 물리적 통제	24
2. 사회적·이념적 통제	37
IV. 북한사회통제의 변화	55
1. 북한 일탈행위의 특성과 변화	55
2. 북한사회통제체제의 변화	67
V. 북한 사회통제의 평가	75
1. 사회통제의 구조적 특성	75
2. 사회통제의 사회적 조건	81
VI. 맺음말	87
참고문헌	91

- 표 목 차 -

<표 1> 당의 기층조직과 당적 통제조직	25
<표 2> 집단별 참석회의	43
<표 3> 주민성분 조사사업	46
<표 4> 3계층 51개부류 분류표	47
<표 5> 성분 분류표	49
<표 6> 복잡군중 분류표	51
<표 7> 북한형법에 나타난 범죄 유형	57
<표 8> 북한형법에 나타난 범죄 유형	59

I. 문제제기

국가 사회주의의 쇠퇴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식량난이 가속화되는 등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현재 북한체제가 쉽게 붕괴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국가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독일이 통일된 직후 그리고 특히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붕괴를 예상한 견해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한 붕괴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오늘날에도 북한 붕괴론은 북한 인식에서 적지 않은 위세를 갖고 있다.

과학적 분석이나 예측이 항상 옳을 수는 없으며 역사적으로 본다면 한 시기에 대세를 이루었던 관점이나 사고가 틀렸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일성 사후 북한 붕괴를 확신하였던 주장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은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대북정책과 남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 붕괴론은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하게 변화하는 인식론적 바탕이 되었고, 이후 조문파동으로 상징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남북한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붕괴론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북한 붕괴론이 북한에 대한 부족한 자료에 따른 잘못된 분석에서 기인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초

2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래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폐쇄된 체제이고, 북한에 대한 가용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에서 북한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득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도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혹은 “망해야 한다”는 선입견이나 당위에 바탕을 두고 분석한다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연구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료의 부족이나 적용 가능한 연구방법론의 한계 등 연구의 애로점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북한연구가 갖고 있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체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연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분석 그리고 이념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연구자세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지나치게 거시적인 맥락에서 북한체제의 존속여부를 결정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 상태의 체제유지 능력을 부분별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체제의 특성, 그리고 변화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특성과 변화가능성 그리고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사회통제체제(social control system)이다.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이 대부분 소멸하거나, 중국과 같이 비록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기존 체제를 고수할 수 있는 까닭은 북한사회가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위기에도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효율적인 사회통제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통제체제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사회통합의 특성과 정도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통로가 되는 동시에 현 북한 체제의 유지능력을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의

사회통제체제가 변화하고 있다면 북한 사회통합의 성격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체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통하여 현단계 북한의 체제유지 능력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회통제체제의 변화를 통해서 북한 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통제에 대한 일반이론을 검토 한 후 사회주의국가 사회통제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북한 사회통제의 특성을 일차적으로 사회통제 기제(mechanism)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통제기제로 분석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물리적 통제 기제로서 여기에는 전사회의 조직화, 물리적 억압기구, 사법제도와 북한의 특수한 처벌제도(공개처형·강제수용)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하나는 사회적·이념적 통제로서 여기에는 사상을 통한 통제, 차별적 대우(계층정책), 그리고 배급제도가 포함될 것이다.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한 후 사회통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통제의 대상이 되는 일탈행위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대응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 사회통제체제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사회통제체제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북한 사회통제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사회통제의 특성을 검토하는 것은 제도적인 차원의 분석으로 북한 원전을 포함하여 주로 문헌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사회통제의 변화는 현상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탈북자의 증언 등을 분석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II. 사회통제의 개념과 사례

1. 사회통제의 개념

주류 사회학에서 사회통제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규범에 반하는 사회구성원의 일탈행위(deviant behavior)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제재를 의미한다.¹⁾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사회통제 개념은 일탈적 행위가 사회규범을 침해함으로써 사회규범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어느 사회체제든지 본질적으로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통제 기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회통제는 크게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공식적 사회통제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일상생활에서 사회구성원들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사회통제를 의미한다. 비공식적 통제는 다시 통제로서의 비난과 비공식적인 처벌의 두 가지 형태로 구현된다. 통제로서의 비난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언어적이고 행위적인 차원의 비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임신부가 지하철에 탑승하였을 경우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젊은 사람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눈초리나 쭈근거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공식적인 벌의 경우는 병원에서 규칙을 잘 지키는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성실한 치료를 수행하거나 보다 많은 정보를

1) Albert K. Cohen, *Deviance and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6).

제공하나 반대의 경우에는 치료를 불성실하게 하고 적절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예가 된다.

비공식적 통제가 통제의 주체가 모호한 반면 공식적인 통제는 경찰서, 법정, 감옥, 소년원, 정신병원, 갱생원 및 사회기관과 같이 일탈행위를 한 사회구성원들을 사회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들 즉, 통제의 주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 사회통제는 사회규범 가운데 하나인 법을 어긴 경우 즉,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공식적 사회통제는 이를 담당하는 기구 혹은 조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제가 가해지는 행위에 대한 명문화된 정의를 갖고 있다.²⁾ 특히 범죄통제의 경우는 세 가지 차원에서 개념화될 수 있는데 (1) 무엇이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법적 골격의 차원, (2) 수많은 범죄 가운데 어떤 것이 통제되는가를 따지는 제도화된 통제 실행, (3) 범죄 통제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사회구조에 끼치는 영향을 따지는 통제의 결과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는 공식적인 사회통제와 비공식적인 사회통제가 모두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통제는 사회적 규범을 강제함으로써, 일탈행위나 사회문제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사회의 사회통제의 성격은 그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회가 사회통합의 정도가 대단히 높고 사회 규범이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통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진다. 따라서 사회통제의 강도도 강하고 종류도 다양하다. 이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사회문제가 빈발하여 사회적

2) Edwin M. Lemert,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New York: McGraw-Hill, 1951).

6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혼란이 야기되거나 사회통합이 도전을 받는 경우에도 사회통제의 강도가 강해지며 사회통제의 종류도 더욱 많아지고,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기구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

사회적 요구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사회통제가 강화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하에서 사회통제의 강도는 높아지며 방법도 다양해진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자발성이 존중되고 공동체(community)가 중요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회적 자발성보다는 사회적 강제가 중요하고, 공동체보다는 조직(organization)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리고 정치적 억압의 광범위하게 있는 환경에서는 공식적인 사회통제가 활성화되고 때로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³⁾

주류의 사회학에서 사회통제를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순기능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비판적 사회학에서는 사회통제를 지배·피지배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회통제는 사회적 억압체제이며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한 기제로서 인식한다.⁴⁾ 따라서 주류사회학에서는 사회통제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특정한 사회통제 기제가 일탈행위의 억제나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갖는가 등의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반면에 비판적 사회학에서는 사회통제가 갖는 본질적 성격이나 공식적 사회통제를 수행하는 기구나 기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

3) 유신시대의 경범죄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머리를 기르거나 짧은치마를 입는 것은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로 대응하여야 할 부문이나 경찰의 단속과 사법적 처리라는 공식적 통제로서 대응하였다.

4) Richard Quinney, *Critique of Legan Order: Crime Control in Capitalist Society* (Boston: Little Brown, 1974), p. 52.

비판적 사회학에서 사회통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하나는 물리적 억압기구로서 정부, 군대, 경찰, 법원, 감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은 폭력을 동반한 처벌 수단을 보유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념적 억압기구로서 종교체제, 교육체제, 가족, 정당, 언론 및 문화체제가 포함된다. 이념적 억압기구는 체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사회에 순응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념의 정당화 효과는 물리적 강제력이 갖는 효과 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물리적 억압기구는 국가의 통제하에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념적 억압기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⁵⁾ 물리적 억압기구나 이념적 억압기구는 형태와 기능에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지배질서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이 지향하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회통제가 효율적이라

5) Louis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 in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Ben Brewster, tran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pp. 141~148. Althusser가 물리적 억압기구와 이념적 억압기구라고 표현한 반면, Quinney는 강제적 통제수단과 정교한 이데올로기적 통제수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Wolfe는 폭력적 억압과 구별하여 이데올로기적 억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Spitzer는 선택적 반응적(분리적)통제와 일반적, 예방적(통합적)통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Richard Quinney, *Critique of Legan Order: Crime Control in Capitalist Society*, p. 137; Alan Wolfe, *The Seamy Side of Democracy: Repression in America* (New York: David McKay, 1973), pp. 4~6; Steven Spitzer, "Toward a Marxism Theory of Deviance," *Social Problems*, 22, 5 (1975), p. 648. 일탈행위와 계급관계에 대한 논의는 Stuart H. Traub and Craig B. Little, "Class And Political Bias in the Study of Deviance," in Stuart H. Traub and Craig B. Little, eds. *The Theories of Deviance* (Itasca, Illinois: F. E. Peacock, 1975); C. Wright Mills, "The Professional Ideology of Social Pathologists," *The Theories of Deviance*; Alex Thio, "Class Bia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in *The Theories of Deviance*.

고 한다면 이는 물리적 억압기구와 이념적 억압기구가 모두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범죄와 범죄통제에 대한 이론도 사회문제와 사회통제에 대한 관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범죄문제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전통적인 시각은 실증주의의 인식론적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정책과학으로 발전하였는데,⁶⁾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립적-과학적 질문으로 개인의 편에서 볼 때 무엇이 범죄의 원인이나는 것과 정책관련적 질문으로서 어떻게 어떠한 조치로 범죄가 경감 또는 제거될 수 있는냐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실증주의 범죄이론은 범죄부와 비범죄부문의 인구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졌다. 따라서 주요한 분석적 초점은 범죄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전제되는 개인적 요인에 주어졌다. 일탈과 범죄의 법적·사회적 성격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전체 사회체제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이 범죄에 대하여 비난을 받는다. 반대로 체제는 생산된 정보를 범죄자들의 교정을 위하여 사용한다. 교정주의라고 묘사된 이 경향은 실증주의적 범죄이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통주의적인 시각과 달리 비판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관점을 원용함으로써 사회문제나 범죄 그리고 사회통제나 범죄통제의 문제를 생산양식, 계급구조, 권력관계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검토한다. 연구에 핵심적인 것은 더 이상 사회문제나 범죄의 개인적 요소가 아니고 자본주의 발달뿐 아니라 사회문제와 범죄에 부착된 여러 가지 계급 특수적 차별양식인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6) G. Pearce, *Crimes of the Powerful* (London: Pluto Press, 1976), p. 25.

에 있어서 범죄자도 심지어 범죄행정도 아니고 사회체제 자체가 문제시된다.⁷⁾

전통적인 실증주의들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또는 근접한 환경적 요인들에서 찾았고, 낙인이론은 상대주의적인 범죄의 관점을 가지고 범죄의 원인에 대한 질문을 회피해버렸다. 그러나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과학주의적 방식으로 범죄의 원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 형태의 범죄를 능동적이고 정치적 투쟁의 형태로 변형시키는데 적합한 요인을 규명하려는 실천지향적 접근 태도를 갖고 있다. 또한 비판적 입장에서는 지배계급의 이익 또는 자본주의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범죄통제의 문제를 연구하였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판범죄학은 법체계의 근원, 법과 지배계급간의 관계, 국가와 법의 관계, 국가와 경제와의 관계를 적합한 연구영역으로 삼고 있다.⁸⁾

학문적 관점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통제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다는 점이다. 주류사회학에서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공식적 사회통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비판적 사회학에서는 공식적 사회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 가운데 물리적 통제와 이념적(문화적)통제를 구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경우 사회통제의 강도도 높아진다는 시각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류사회학에서는 사회통제의 다양화나 강화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반면 비판적 사회학에서는 억압과 지배구조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

7) Jock Young, "Foreword," to Pearce *Crimes of the Powerful* (London: Pluto Press, 1976), p. 11.

8) 심영희,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비판범죄론적 시각」 (서울: 한울아카데미, 1988), p. 9.

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사회에서 사회통제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통제 기제의 성격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사회통제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 일탈행위가 감소하고 사회문제가 축소되는 등 사회통제가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 물리적 강제에만 의존하는 사회통제는 일탈행위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불과하고, 적지 않은 경우 일탈행위나 사회문제를 내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⁹⁾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통제가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는커녕 사회의 분열과 사회발전의 지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조건에 적합한 사회통제 기제의 선택도 사회통제의 효율성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수준이 낮고 사회구성원들간에 의사소통구조가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공식적이고 물리적 사회통제가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사회발전의 수준이나 사회구성원의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는 비공식적이고 이념적인 사회통제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사회통제가 국가권력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국가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통제는 근본적으로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회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제는 전체사회의 통합을 가져오기보다는 계급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구성원의 동의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 사회통제체제는 물리적 통

9)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금주법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금주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통제를 추구하였지만 금주가 확산되기는커녕 결과적으로 조직범죄가 양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에 더욱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정치적 권력교체 등의 변혁적 상황에서 사회통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급격한 사회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입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대상이 자본주의체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자발성을 중시한다. 이에 비해서 사회주의체제는 개인적인 가치나 이익보다는 집단적 가치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체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통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 내지는 사회적 위상의 차이로 이어진다. 즉, 개인적 이익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통제는 개인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회통제의 방법이나 절차가 사회통제 자체의 정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¹⁰⁾

반면에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집단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사회통제의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확보된다. 또한 자본주의체제가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통제의 공식적 사회통제 혹은 물리적 억압기구의 최소화가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 특히 인류가 경험 하였던 국가사회주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하면서 권력의 집중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당(혹은 국가)이 중심이 되는 공식적 사회통제가 당연하게 인식된다.

또한 사회구조의 특징도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사회통제

10) 도청, 고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예가 된다. 자본주의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절대적 인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문 등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체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미란다 법'이 상징하고 있듯이 통제 절차의 문제도 중요시된다는 것이다.

의 차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조직의 존재형태이다. 자본주의의 사회조직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같은 물리적 억압기구들과는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조직에의 참여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사회조직의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각 사회조직간의 연결관계도 없거나 있더라도 느슨하다. 물론 자본주의체제에서도 사회조직은 사회체제와 개인의 중간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사회체제에 통합시키고 동시에 사회체제가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을 개인에게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통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국가와 별도로 존재하는 강력한 당 조직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조직은 당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조직 참여는 강제된다. 이와 같은 사회조직의 위상 차이는 사회통제 경로의 차이로 이어진다. 즉, 사회주의체제에서 사회구성원은 하나 이상의 사회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조직을 통하여 체제가 지향하는 가치나 규범을 수용하게 되는 정도가 훨씬 강하다. 또한 당과 국가에 수직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사회조직은 체제가 규정하는 규범에 바탕을 둔 조직 내 사회통제기제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을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이중적 사회통제의 일익을 담당한다.¹¹⁾

사회구조의 차이에서 자본주의체제가 사회발전의 동력을 물질적 동기유인에 두는 반면, 사회주의체제는 윤리적 동기유인에 사회발전을 기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질적 동기유인은 물질적 보상을 통하여 개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지만, 윤리적 동기유

11) 구소련의 '콤소몰(Komsomol)'이나 중국의 '共靑團(공산주의청년단)'이 그 예가 된다.

인은 개인으로 하여금 노동과 사회발전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사회화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 사회발전에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문학예술을 포함한 문화전반의 기본 목표는 선전·선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사상과 문화에 대한 당과 국가의 관리는 불가피하고 정당하다. 따라서 이념적 억압기구에 의한 사회통제가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¹²⁾

사회통제가 갖는 기본적인 지향점 즉, 사회적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은 체제 성격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가 전제하고 있는 인간상이나 지향하고 있는 가치체제가 다른 것처럼 사회통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나 역할도 해당 체제에 따라서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혹은 자유민주주의)의 관점과 틀로서 사회주의체제의 통제체제를 분석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통제를 정치적 탄압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사회통제를 부정적인 것으로 즉, 가치개입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분석의 초점은 사회통제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들추는데 모아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체제나 사회분석에서 사회통제는 그다지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현실 국가사회주의가 권력관계에서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12) 원칙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서 문화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통제는 기본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화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방법은 보조의 지급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이 중심이 된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검열이라는 직접적인 방식을 폭넓게 활용한다.

14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시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 것도 분명하지만 사회주의의 근본 특성이나 체제유지에서 사회통제가 갖는 위상이 자본주의체제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회주의 사회통제체제의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통제와 체제유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2. 사회주의 국가 사회통제의 사례: 구소련의 경우

구소련의 사회통제는 폭력 및 공포 그리고 정치적 설득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건국 초기에는 폭력이나 공포와 같은 방법에 의존하여 물리적 통제의 행사가 만연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비밀경찰이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 사후에는 점차 설득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구소련의 물리적 통제를 대표하는 기구는 정규경찰과 국가공안위원회(KGB: Committee for State Security)이다. 정규경찰은 내무성이 관장한다. 내무성은 경찰총국, 교정 및 노력기관담당총국, 국내군대총국의 세 국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찰총국은 형사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며, 교정 및 노력기관담당총국은 전국의 교도소 및 강제노동수용소 등을 관장하고, 국내군대총국은 국내 공안유지 및 죄인들의 후송 등을 책임진다.¹³⁾ 그러나 실제로 사회통제의 핵심은 정규경찰 보다는 국가공안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구소련 초기 비밀경찰인 체카(Cheka: All-Russian Extraordinary Commission)에서 비롯되었다. 체카는 반혁명 및 태업과의 투쟁을 목표로 선언하였으며, 특히 신문과 반대당의 사찰 및 탄압을 1차적 임무로 삼았다. 체카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가

13) 김학준, 「소련정치론」 (서울: 일지사, 1976), pp. 294~296.

만드시 요구하는 폭력적 경찰감독체계(system of terroristic police control)라고 할 수 있다.¹⁴⁾ 구소련에서는 체카의 임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¹⁵⁾

적은 항상 감시하는 눈이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져야 하며, 또한 그가 소비에트 권력에 반대하는 어떠한 계획을 시도하자마자 그의 머리 위에 무거운 처벌의 손이 무자비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져야 한다. 체카의 처벌은 법정의 결정에 따라 단두하는 길로틴이 아니다. 체카는 적을 범죄의 현장에서 잡으면 재판 없이 그를 파괴하며, 그를 수용소에 가둬 뚫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상세한 수사와 광범한 강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판에 회부한다.

레닌은 혁명초기 안보기구의 피해를 비판하였으나 혁명 완수 이후에는 입장을 바꾸어 국가안보는 정치적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의 소관업무임 주장하면서 반혁명세력과 사보타주 타도를 위한 특별위원회로서 체카를 구성하였다. 이후 내란이 끝난 뒤 체카는 해체되었으나 1922년 국가정치보안부, 이듬해에 연방국가정치보안부가 설립되었다. 연방국가정치보안부에서 수행하였던 비밀경찰 업무는 이후 1943년의 국가보안인민위원회, 국가보안성을 거쳐 1954년 국가공안위원회로 이어졌다. 1954년 구소련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령에 의해 소연방 각료회의 산하기관으로 발족한 국가공안위원회는 명칭은 위원회라고 되어 있으나 연방 공화국의 하나의 성이며 제1총국(정보국), 제2총국(국내공안국), 국경군대총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14) Carl J. Fredrich and Zbigniew K. Br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pp. 9~10.

15) 김학준, 「소련정치론」 p. 106에서 재인용.

16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공안위원회의 임무는 세 가지로서 소련국경의 보호, 정치범의 수사 그리고 해외첩보업무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당 서기국에 직선적인 채널이 있어 당서기장이 직접 지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보안기구에 관련된 인원만 해도 수십만 명을 웃돌며, 수백만의 협력자를 가지고 막대한 실권을 행사해왔다.¹⁶⁾

물리적 통제와 짝을 이루는 것이 정치적 설득이라고 할 수 있다. 구소련에서는 스탈린 사후 스탈린시대의 청산을 강조하면서 여론의 동원과 독점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설득이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서 구소련에서는 매스미디어를 국가가 독점하고 통제하였는데¹⁷⁾ 정부의 커뮤니케이션부와 이 부의 신문보급수석행정국이 매스미디어 일체를 담당하였다. 국가가 장악한 매스미디어로는 타스 통신(TASS: Telegraphic Agency of the Soviet Union), 그리고 당을 대변하는 프라우다와 정부를 대변하는 이즈베스치아가 신문이 대표적인 매체이다. 전국적인 신문과 통신이외에도 구소련에서는 정부조직 그리고 콤포수물이나 노조 그리고 작가동맹과 같은 사회조직들도 기관지를 갖고 있었으며 직업별 신문도 발행되어 약 8천여 개의 신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설득은 당의 선전선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전선동부는 각종의 공식 기관지, 통신 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기도 한다.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에는 공장 또는 일반사회에 소속된 직업적 선동자가 당이 매주 발행하

16)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소련사회문화사전」(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pp. 29~31.

17) 조규화, “소련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한국외국어대학교소련문제연구소 편, 「소련정치과정」(서울: 정음문화사, 1985), p. 270.

는 선동자편람에 따라 주어진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방법, 즈나니라고 불리는 사회단체가 당의 교시에 따라 모든 도시에서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방청자들과 대화하는 방법이 있다.¹⁸⁾

정치적 설득은 다른 말로 하면 이념적 통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설득은 당과 국가의 이념과 정책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쟁적 영향요소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독자적 사유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가족과 교회는 주된 공격의 대상이었다. 또한 반항적 사유체제를 지향하는 지식인에 대한 통제도 가해졌는데, 1960년대부터 나타난 작가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운동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선전과 실질적인 탄압이 병행되었다.

정부에 반대하는 지식인이거나 동조자들에 대해서는 비밀경찰을 통해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탄압하였다. 첫째, 형사소추와 이에 따른 강제노동, 혹은 호한지로의 유형(流刑), 불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반정부운동가들은 이 방법에 의해 규제되며, 시민에 주는 위협적 효과가 크다. 둘째, 정신병동으로의 강제입원이다. 당국은 오직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만이 공산주의가 좋은 것을 모르고 체제를 비판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셋째, 외국으로의 추방 또는 해외이주의 허용이다. 이 방법은 두뇌유출의 우려와 반소비에트 인사를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강제수용소나 정신병원에 넣기에는 너무 저명한 인사를 국내인과 절연시킨다는 이점이 있어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념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화를 국가가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사회화를 수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 김학준, 「소련정치론」, pp. 198~200.

첫째, 국가주도의 사회화를 위해서 가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가족이 수행하는 사회화의 기능이 공적인 부분으로 이양된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주의 건설초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이전의 정치정향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계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구소련에서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가족과 유리시키고, 심지어 부모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였다.¹⁹⁾

둘째, 학교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념을 확산시키는 정치사회화에 있다. 일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보편적 가치를 주입하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교육보다는 정치이념 교육이 우선하며 이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편성된다. 따라서 학교는 이념적 기관이 된다.²⁰⁾

셋째, 민주주의 국가의 동료집단은 자연발생적으로 사회화의 매체가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인위적으로 청소년 조직을 구성하여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동료집단의 정치사회화를 대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콤소몰(Komsomol)'이 이를 대표한다.

넷째, 성인의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각종 직업조직을 통하거나, 인위적인 재교육과정을 통하여 성인들 재사회화한다. 각종 조직을 통한 정치사회화는 일반인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체제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재사회화가 이루어진다.

다섯째, 모든 매스미디어를 국가가 장악하고 이를 통하여 정치사회화가 일관되게 이루어진다. 지배엘리트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로 하향적인 정보전달 역할을 맡는 간행물, 텔

19) 김덕, "정치사회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련문제연구소 편, 「소련정치과정」, p. 256.

20) 김덕, "정치사회화," p. 259.

레비전, 라디오는 대중의 협력과 지지를 호소한다.

여섯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가활동이나 개인적 창작에 주안점을 두는 문학·예술 등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사회화를 위하여 동원된다. 후르시초프는 1956년 20차 전당대회에서 영화를 노동 인민의 공산주의 교육을 위한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하였다.²¹⁾ 모든 예술적 창작활동은 당의 감독 하에 창작되어지며, 그 작품의 내용은 당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소련을 포함하여 사회주의국가에서 권력에 대한 대항운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제재를 가하였다. 그 방법은 회유와 억압의 혼합책(유고), 차별대우나 주변화(헝가리) 혹은 불용인과 강경탄압책(소련) 등과 같이 여러 가지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목표는 대항체제에 대한 억제보다는 근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통제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엇보다도 제재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대항운동에 대한 집중적인 선전공략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주기적 선전공략과 더불어 사회내의 전통적 균열현상을 이용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노동자와 인텔리겐차 사이나, 소련의 경우처럼 러시아 민족과 다른 소수민족 사이). 이러한 전술이 불가능한 곳에서 정부는 보통 대항체제내의 연계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인력을 투입하기도 한다. 이 전략은 대항체제의 결속을 와해시키고 그 체계적 발전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²²⁾

21) *Current soviet Policies, II: The Documentary Record of the 20th Communist Party Congress*, Leo gruliov, ed. (New York: Praeger, 1957), p. 67. 조규화, "소련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p. 278에서 재인용.

22) Robert Sharlet, "Dissent and the 'Contra-system' in the Soviet Union," 안택원 편저 「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p. 303.

사회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구소련 사회통제의 중요한 방안의 하나였다. 특히 1918년에 창설된 청년공산동맹(Komsomol)은 14~28세의 청소년이 가입하는 단체로서 학교에서의 과외활동이나 노동자들의 여가활동도 조직한다. 콤소몰은 당의 하부기관이 아니나 당의 초급당부에서 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기관에 상응하는 조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콤소몰의 제1서기는 당중앙위원회의 정위원이 된다. 당은 콤소몰을 엄중히 감독하며 당원의 대부분을 콤소몰에서 충원한다. 콤소몰과 같은 사회조직은 청년에 대한 정치교화와 사회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권과 청년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정권의 프로그램을 위한 동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소련의 계층정책도 사회통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였으나 실제적으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구소련에서는 공식적으로 계급간의 적대감은 사라졌으나 계급간의 차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스탈린은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능력과 근로에 따라 보수가 차별화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공언하였다. 특히 공업과 기술 인텔리겐차의 우대정책 따라 구소련 초기의 노동자계급의 신화와 평등주의의 신화는 사라졌다.

구소련에는 공식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두 그룹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텔리겐차를 더하여 세 사회 그룹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그룹들은 계층화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당경력 등을 통하여 상향이동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기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지 않았으며, 이들은 집단농장인 콜호즈나 소브호즈에 속하였고, 일종의 신분증인 국내여권제에서 농민들을 제외하여 사회이동을 억제함으로써 이들을 농장에 귀속시키

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구소련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통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그 방법은 시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소련의 경우 스탈린시대는 강력한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리적 통제기구가 사회통제의 핵심이었으나 이후에는 이념적 통제가 중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통제 방법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스탈린의 전제적 독재체제하에서는 물리적 억압이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었으나, 후르시초프 집권 이후 스탈린 격하운동이 벌어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통제방법이 강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의 진전과 시민의식의 전환도 통제방법 변화와 관계가 적지 않다. 지식인 집단 중심의 반항운동이 제기됨에 따라 물리적 통제보다 이념적 통제 즉, 선전선동이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구소련에서는 국가공안위원회로 대변되는 물리적 억압기구는 지속적으로 작동하였다.

구소련등의 사회주의국가가 강력한 물리적 억압기구를 중심으로 사회통제체제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회통제체제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구소련의 경우는 집권층의 변화(고르바초프의 집권)로 기존 사회통제체제에 대한 변화가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³⁾ 그러나 반대로 집권층의 정책 변화(개혁개

23) 국가공안위원회의 역할 변화는 1967년 안드로포프의 서기장 취임을 계기로 조금씩 시작되었다. 국가안의 국가로 군림해 왔던 공안경찰에 대하여 당의 지도층이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비밀경찰의 기능은 주로 해외 공안에 국한되었으며, 국내 공안문제의 많은 부분을 내부성으로 이양하였다. 더욱이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고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르가 제기된

방의 시행)는 기존의 사회통제체제로서 구체제를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통제체제는 근본적으로 사회체제의 정당성의 확보여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국가공안위원회로 상징되는 물리적 통제나 이념적 통제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것이 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다양한 반체제 세력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사회변화의 구조적 압력은 반대로 반체제 운동을 격화시킨 경향이 없지 않다. 특히 알바니아와 같이 민중이 사회주의 개혁이 중심이 되었던 국가에서는 기존 체제를 지탱하는 사회통제 기제가 작동하였음에도 변화에의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활동반경을 더욱 축소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소련사회문화 사전」, p. 32.

III. 북한사회통제의 특성

북한의 사회통제에 대한 기존 논의는 전통적인 시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통제를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물리적 사회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의 독재권력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보위부나 사회안전성과 같은 강력한 물리적 억압기구를 통하여 북한주민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물리적 억압기구와 더불어 사회통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회조직체제도도 북한의 사회통합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체제에 강제로 통합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위로부터의 물리적 사회통제만으로 북한의 사회통합을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종의 동어반복일 뿐 아니라, 유사한 권력구조를 유지하였던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사회통합과 사회통제체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사회통제에 대한 보다 다양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물리적 통제

가. 당 중심으로 전사회의 조직화

사회주의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당의 지배이다. 북한의 경우도 조선노동당이 국가나 행정부처에 우선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명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헌법 11조). 그리고 당조직은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있다. 군대에서 일반 공장에 이르기까지 해당 분야의 공식적인 조직체제와 별도로 당조직이 구축되어 있으며, 당조직의 결정권이 우선한다. 조선노동당의 조직은 당의 중앙조직, 도(직할시)의 당조직, 시(구역)·군의 당조직, 당의 기층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의 최하 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표 1〉 참조).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의 하부조직인 시·군의 당조직과 당의 기층 조직을 통하여 주민들을 조직적이고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향유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작업현장에서 작업반과 당의 세포조직이 병존하고 있고, 작업반장보다 당의 세포위원장의 영향력이 크다. 또한 당은 당원들에게 행정기관과 일반 주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의 공적·사적 생활을 통제한다. 이와 같은 조직구조는 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전체 사회를 통제할 수 있게끔 한다. 당조직의 정점은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되며, 조직지도부는 당 조직을 통하여 전체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핵심적인 조직이 된 3대혁명소조의 경우도 작업장과 같은 일상적인 삶에서 주민들을 통제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표 1〉 당의 기층조직과 당적 통제조직

구 분	조 직	근 거
당세포	일반적인 경우: 5~30명까지의 단위 특수한 경우: ① 3~4명 또는 30명 이상의 단위 ② 3명 미만의 단위(당소조직)	당규약 42조1항 (1980.10.13)
초급당조직	31명 이상이 있는 단위	당규약 42조2항
부문(마을)당조직	초급당조직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 조직	당규약 42조3항
분초급당위원회	초급당, 부문당 또는 당세포의 조직형성만으로는 당기층 조직구성이 부적당한 경우에 초급당조직과 부문 당조직 사이에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 조직	당규약 42조4항

* 출처: 「북한총람 1983~1993」(서울: 북한연구소, 1994), p. 232.

당조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조직들도 사회구성원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북한의 모든 주민은 학교나 직장에 속해있으면 서도 동시에, 자신의 직업과 연령 등에 따라 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직업총동맹 등의 단체에 가입되어있다. 이와 같이 모든 북한 주민들은 학교나 직장과 같은 공식조직과 당을 비롯한 각종 사회조직들에 이중적으로 속하고 있으며, 조직활동을 통하여 이중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조직이나 사회조직과는 별도로 주거지역별로 20~30세대로

구성되는 인민반(도시)과 분조(농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인민반은 반장과 선동원의 감시·감독 하에 월 2회의 “생활총화”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한다. 생활총화에서는 어린이 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동원, 공원질서 유지에서 목욕과 이발 등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토론의 주제로 삼는다. 또한 각 인민반에는 ① 반장(직장에 나가지 않는 여성당원이거나 간부부인) ② 세대주부반장(당이 통제, 선거시나 행사시에 인민반을 통제) ③ 위생반장(환경 청소담당) ④ 선동원(인민반의 당분조장 겸임) 등과 같이 감시 감독원을 두고 있다. 인민반이나 분조와는 별도로 1958년까지 1973년까지 유지되었던 5호담당제도 일종의 사회통제 기능을 수행하였던 당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5호담당제는 북한의 전 세대를 5호씩 나누고 5가구를 담당하는 한 명의 열성당원이 5호 내외의 세대만을 분담하여 생산에서 사상으로까지 지도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²⁴⁾

조직적 통제의 하나로서 사회이동에 대한 통제를 생각할 수 있다. 여행통제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없는 제도로서 북한에서는 자기 마을 밖으로 나가려면 여행증명이 필요하며 그러한 증명은 소정의 필요한 여행에 한해 발급된다.²⁵⁾ 누군가가 자기 군 지역을 벗어나 여행을 하고 싶다면 철도승차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하고 출발과 도착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를 떠나 가까운 곳으로, 예를 들어 트럭을 타고 가면 여러 곳의 초소 등을 통과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여행 규정은 엄격히 시행된다. 해외 여행은 관공리들의 대표단원들과 신뢰받는 예술인들과 공연자들에게 국한된다. 해외이민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수 피난

24) 「북한총람 1983~1993」, p. 233.

25) “주민통제,”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민들 혹은 망명자들만이 국외로 빠져 나오는데 성공했을 뿐이다. 사회이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서 당간부들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당적 통제의 또 다른 통로로 활용된다.²⁶⁾

나. 물리적 억압기구

북한의 사회통제기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강력하고 효율적인 물리적 억압기구라고 볼 수 있다. 물리적 억압기구를 대표하는 것이 인민무력성(군대),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성 그리고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이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사찰기구로서 형사재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정치사상범에 대한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보위부는 1973년 사회안전부와 정치보위부를 분리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하여 사회안전부 가운데 국가보위 관련국인 제1국, 제2국, 제 9국과 제3국 및 제 7국의 일부를 독립 증편하여 국가정치보위부로 발족하였다. 이후 1982년 국가보위부로 그리고 1993년 국가안전보위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주요 임무는 체제보위를 위하여 반국가사범을 색출하고 반당·반국가 종파분자들을 특별 독재대상구역, 정치범교화소 등에 수용하여 특별관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안전보위부는 첩보활동, 대외정보의 수집, 기관·기업소 및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고 호위총국과 협조하여 김일성부자 비롯한 고위간부의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위부는 일반주민들의

26) 탈북자 정병호 증언, 강광식 편저, 「북한의 실패: 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 86; Hans Maretzki, *Kim-Isms in Nord Korea*, 「병영국가북한」, 정경섭 옮김 (서울: 동아일보사, 1991), p. 136.

동태를 항상 파악하며 유사시에 변절자와 지지자를 선별하는 주민사상사찰의 전담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위부는 당 조직에 불순분자가 입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에 간섭하지 못하고 감시업무만을 수행한다. 반면에 사회안전부는 수사와 인원동원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위부의 업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간첩이나 반당·반체제행위자를 검거하였을 때는 즉각 국가안전보위부에 이관하고 교화소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²⁷⁾

사회안전성은 경찰조직으로 공공질서의 유지·강화뿐 아니라, 국가의 재산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감시·적발하여 처벌한다. 사회안전성은 1945년 11월 정치보안국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948년 북한정부 수립 시에는 내무성 산하의 일개국 형태로 존재하다가 1951년 사회안전성으로 분리·독립한 다음 1952년에는 내무성으로 일단 재흡수되었다가 1962년 재분리되었다. 1972년 헌법에는 사회안전부로 개칭되었다가 1998년 헌법에서 정무원이 내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다시 사회안전성이 되었다.

1973년 정치보위부가 독립한 이후에 사회안전성은 국가치안을 담당한다. 명목상으로 사회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으나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사회안전성의 주된 임무는 ① 반국가행위의 감시와 적발 및 처벌 ② 반혁명행위의 감시와 적발 및 처벌 ③ 회색분자·불편분자·종파분자·지방주의자 등의 적발 및 제거 ④ 주민개개인의 신원조사 ⑤ 외국방문객의 감시 ⑥ 비밀문서의 보관 관리 ⑦ 교화소 및 로동교양소의 운영관리 등이다. 사회안전성에는 독자적인 무력조직인 「인민경비대」를 운용하는 까닭에 국가안전보위부보다 2배에 가까

27) 이진중·이경렬,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pp. 82~85.

운 무력을 갖고 있으며,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1982년 김정일이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데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교시한 것에 근거하여, ‘해당 관할지역 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 단체와 공민들의 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 집체적 지도기관으로 승격 강화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해당 지역 안의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의 법무생활정형을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법무생활을 감독 통제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의 대표들이 망라되어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비상설기관으로 이 위원회의 성원들은 일상적으로 자기 단위에서 일하다가 회의가 소집될 때만 모여서 문제를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검열위원회와 검찰소를 비롯한 감독통제기관들에게 감독통제를 올바르게 하도록 하고 그 집행정형을 제때에 보고하도록 한다.²⁸⁾

다. 사법제도

범법자를 처벌하는 사법제도는 헌법구조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소송절차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진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체제반대 세력을 통제하는데 있다. 1987년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통해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하는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실시하고 김일성 부자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요소라도 가장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

28) 『북한총람 1983~1993』, p. 235.

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되므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입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범죄인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²⁹⁾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형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즉 "범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동일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그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라고 규정하여(형법 제10조) 유추해석을 허용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언제든지 범죄인으로 규정·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북한형법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소급효를 인정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을 부인하고 있다.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해서는 앞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형법 제42조) 범인은 죽는 날까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비·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해서는 기수범과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형법 제15조), "(범죄를) 추진자와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형법 제18조) 범죄의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셋째, 김일성 부자를 비방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는 제44조부터 제55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무조건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되어 사형이나 전 재산 몰수형에 처해진다. 넷째, 은닉범·불신고범·방임범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형법 제54조, 제

29) 사법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하여서는 이건종·이경렬,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 2장 2절 참조.

55조), 반국가범죄의 경우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연좌제를 제도화한 것이다.³⁰⁾

재판을 담당하는 각급 법원은 각급 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³¹⁾ 이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북한 헌법은 소송사건은 공개적으로 처리되며 피소자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건 심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판 절차는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범죄자는 공개재판을 하든 즉결 처분한다던가 징역을 보낸다던가 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반면, 정치범죄자는 보위부에서 취급한다.

북한의 변호사는 변호사회의의 지도를 받는 직원이라 할 수 있다.³²⁾ 바로 이러한 점이 북한 변호사제도의 한계를 잘 드러낸다.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변호사들이 변호사회의 업무분배에 따라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선전하는 일종의 정치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변호사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변호사법 제11조). 이는 북한의 변호업무가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에게 정확하게 침투되어

30) 최의철 외, 「북한 인권백서 1999」,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41~42.

31) 1998년도 개정헌법 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32) 북한의 변호사제도에 대해서는 「북한사법제도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 6장 참조.

실시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보다는 범죄혐의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과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예심하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74조), 도·직할시 재판소를 제1심판할로 정하여(형사소송법 제181조) 일반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성이나 검찰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간첩이나 반당·반체제행위자 등 반국가범죄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가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국가기관 체계상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내각을 상부구조로 하여 그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불과하다. 즉 북한의 재판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의 사업지도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만큼 인권침해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북한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양이 없는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인민참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인민참심원제는 형식상 영미의 배심원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제도는 사실상 노동당의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소자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재판심리에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 참가한 때에는 그가 먼저 피소자의 죄행을 폭로 규탄하게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고 인민참심원의 역할을 규정한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을 위해 각 단위마다 설

치한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모든 범죄자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군 단위의 경우, 군 당책임비서, 군 행정경제위원장, 군 보위부장, 군 안전부장, 군 검찰소장으로 구성된 '군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형식상 사회주의 법 준수교육 및 범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난 등으로 사회일탈행위가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주민뿐만 아니라 당·정 간부들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과 일부 경제범을 수감하는 사례가 흔하다. 탈북자 김운학은 그의 친구였던 김덕철이 1988년 2월 말 경에 중앙당 신소과에 "공화국 경제정책이 현 실정에 맞지 않으며 경제발전을 하려면 개인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비밀투서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는 얼마 후 검거되어 행방불명되었으며 그의 조모·가족·삼촌 등 일가족은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탈북자 이영심(1998.6 입국)은 "신소는 헌법에 명기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제도이나 군, 시, 도를 거쳐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자신이 화를 당할 것 같으면 무시하며, 신소한 자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중국에는 유일사상체계에 저촉된다고 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³³⁾ 또한 베네주엘라 시인으로 김일성 전기를 번역차 방북하였다가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은 라메다의 증언에 따르면 공개재판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했으며, 그가 선택하는 변호사의 변호도 받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정확한 죄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비공개재판을 통해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³⁴⁾

33) 탈북자 이영심 증언, 통일연구원 변담 (1998.9.9).

라. 공개처형과 강제수용

물리적 억압을 통한 사회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개 처형과 강제수용 제도이다. 공개처형제도는 과거에도 가끔 실시되었으나 최근 식량난이 악화되고 사회주의이념이 약화됨에 따라 일탈 행동이 급증하여 공개처형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개처형은 공개재판과 잇달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진에는 1년에 한번쯤은 공개재판을 합니다. 수성천 뚝에 공개재판 장소를 해놓고, 버스정류소나 역전 같은데 죄인의 이름과 어느 날 어디서라고 공시해 놓으면 사람들이 재판하는 걸 보러 갑니다. 저도 어느 해인가 호기심에선지 한 번 갔는데 사람 죽이는 것보고 너무 끔찍해서 그 다음부터 안갔습니다. 제가 본 것은 무슨 절도, 강간, 살인, 이런 죄로 다섯 명을 재판했는데 둘 죽이고, 둘은 10년, 15년인가 징역 먹이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죄는 좀 있지만 고칠 수 있겠다 해서 무죄 석방했습니다³⁵⁾

내가 처음 공개처형을 본 것은 80년 고등중학교 3학년 때였다. 마침 그날 처형당한 사람은 내가 다니던 학교 친구의 어머니였다. 40세쯤 된 그 아주머니의 죄목은 「부정대출 및 미상환죄」였다.... 사회안전부에 걸려된 그 아주머니는 1년 정도 지하감방에서 예심을 받은 뒤 집행장으로 끌려나왔다. 처형장소는 남포시 천리마구역의 한 야산이었다. 산이 새카맣게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고 당에서는 방송용 차량까지 동원하였다....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녀 외에도 8명의 사형수가 함께 끌려나왔다³⁶⁾

34) 강광식 편저, 「북한의 실태: 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 p. 42.

35) 탈북자 김만철 증언, 월간조선 편집부 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서울: 조선일보사, 1991), p. 82.

물리적 억압기구로서 북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통제구역'으로 알려져 있는 정치범수용소이다. 초창기에는 수용소 면적이 한국의 면 단위에 해당하는 1개 리 정도에 그쳤으나, 1973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 활동이 시작되면서 수용소와 수용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80년 노동당 6차대회를 통해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이후 세습체제를 반대한 당·군·정 간부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최소한 4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1982년에는 8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회와 격리된 채 종신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이후 1980년대 말 동구의 붕괴로 자유와 개혁의 바람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더욱 늘어났으며, 수용인원도 약 2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함경북도 회령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탈북한 안명철³⁷⁾은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산하에만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었으나, 중국 국경에 인접하여 위치가 탄로난 함북 온성군 2개소와 평양에 인접하여 비밀탄로의 우려가 있었던 5개소는 폐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평남 개천의 「14호 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 함북 화성의 「16호 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 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 등 5개 소로 통폐합되었고, 전체 수용인원 약 20만명도 이 곳으로 재배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수용

36) 탈북자 김선일 증언, 월간조선 편집부 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pp. 139~140.

37) 탈북자 안명철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6.7.9).

시설이 폐쇄되고 수감자들이 다른 수용시설에 분산 배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귀순자 강철환과 이순옥은 1998년 2월 2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에서 현재 약 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미 국무부도 1998년 1월 30일 발표한 「'97 각국 인권보고서」에서 정치범수용소에 15~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원(1999.1.22)은 함북회령(5만), 함북청진(1.5만), 함북화성(2만), 함남단천(1만), 함남덕성(1만), 함남요덕(5만), 자강동신(1.7만), 평북천마(1.5만), 평남개천(1.5만), 평남북창(5천) 등에 10개의 수용소를 설치하여 체제위해분자 20만 7천여명을 재판절차 없이 집단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명철은 정치범수용소들이 대부분 오지나 탄광지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승호리수용소」(1991.1 폐쇄)의 경우처럼 비밀탄로와 노출 방지를 위해 지하감옥 형태로 설치된 곳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승호리수용소」와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는 정치범 본인만이 수용되는 1급 정치범수용소라고 밝혔고, 이 외에도 국가안전보위부 '3국' 내에 다수의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에 대규모의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 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구역'이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의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 구역'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출소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 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된다.38)

물리적 억압기구의 사회통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로질서 위반 등의 일상생활도 철저히 감독한다. 사회안전성이 관할하는 일상생활의 일탈행위는 적발시 벌금을 물고, 교양실에서 교양을 받아야 한다. 교양실은 대도시의 구역당 하나씩 존재할 정도로 많으며, 복장에 대한 단속도 하는 등 통제 범위가 대단히 넓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특히 보위부의 통제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위부의 경우 각 공장기업소의 보위부원실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정치적인 동태를 감시한다. 보위부원 일인당 30명의 정보원이 운용되는데 사회안전성의 적발이 주로 벌금이나 교양실시의 제재를 받는 반면, 보위부원의 적발 사항은 추방 등의 강력한 제재를 동반한다.39)

2. 사회적·이념적 통제

가. 사상을 통한 사회통제

북한체제의 사회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치 이념이다. 특히 집단주의와 주체사상이 사상을 통한 사회통제의 핵심이

38)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안혁, 「요덕 리스트」(서울: 천지미디어, 1995);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①~③」(서울: 향실, 1993); 탈북자 김난준 증언, “유형지같은 독재 대상지역,” 월간조선 편집부 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참조.

39) 탈북자 김만철 증언, 월간조선 편집부 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pp. 83~84.

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집단주의 정신이 전면적으로 구현된다”고 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헌법(1998.9) 제63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김정일은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주체사상은 현재 북한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대신한 기본 정치이념이다. 1992년 헌법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이념으로 삼는다”(3조)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주체사상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지도이념이 동시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종교적 집합표상이 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초기 대외자주성 원칙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바탕으로 자주적 국가발전전략으로 출발함으로써 강력한 호소력을 확보하였고, 이후 점차 김일성 정권이 안정됨에 따라 지배구조에 대한 논리적 이념체제로 발전되었다.

1970년대에는 김일성주의화와 혁명적 수령관으로 변화됨으로써 정권유지에 이용되는 등 통치담론으로 변형되었다. 또한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소위 인간개조 사업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가치와 주체사상을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를 계기로 철학적 체계화가 일단락된 후 인간중심 철학이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1986년에 제기된 사

회정치적생명체론은 수령을 뇌수로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결합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하는 수령관과 집단주의 생활원리를 이론적으로 보완하였다.

북한의 지배이념을 주민들에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정치사업,' '정치사상사업,' '정치사상교양,' '사상교양,' '사상사업,' '주체사상교양'이라고 표현되는 정치사회화이다.⁴⁰⁾ 특히 집단주의와 주체사상과 같은 정치이념이 사회통제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북한에서는 사상교육과 교양체계를 발전시켜왔다. 가정과 탁아소, 유치원의 유아교육에서부터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및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민학교 4년 동안 사상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어교과서의 67%가 정치사상을 강조하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¹⁾ 정치사상교육은 성인들에게도 실시되고 있는데 성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조직이나 인민반 혹은 직장에서 '김일성 교시' 및 '김정일 말씀'을 주기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간부

40) 도홍렬,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최명 편, 「북한개론」(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26. 김일성은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라는 1958년 11월 20일의 연설에서 '우리가 하루빨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전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591). 따라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각종 교양은 정치사회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1) 남북문제연구소, 「교과서를 통해서 본 북한」(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4), p. 55. 인민학교 총 수업시간 3,451시간중에 독립된 정치교육 시간이 304시간이며, 고등중학교 총 수업시간 6742시간중에 정치교육에 관한 과목의 시간 총계는 669시간이나 된다. 통일원 정보분석실, 「북한개요 92」(서울: 통일원, 1992), pp. 332~333. 그러나 공식적인 정치교육이 외에도 역사나 윤리 그리고 언어교육과정에서도 이념교육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전체 교과과정에서 정치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들은 토요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하며, 일반 노동자·농민은 월요일 일과시간이 끝난 후 저녁에 2~4시간씩 '월요학습침투'라는 이름으로 학습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요강연회, 직장에서 작업반별로 오전 7시30분부터 30분 동안 갖는 아침독보회 등 다양한 정치교육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북한은 정치이념을 계획된 절차에 따라 인민들에게 내면화시키는 정치사회화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당이 지배하고 있는 TV나 라디오 신문 등의 매스미디어도 지배이념 확산의 중요한 매체이다. 또한 김일성이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은 일반적인 정치교양이나 교육사업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한데서 알 수 있듯이⁴²⁾ 문학·예술작품을 적극적으로 정치사회화에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회화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조직적인 재사회화를 위하여 반복학습을 강조하고 있다.⁴³⁾ 이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한다는 것은 학습을 언제나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그것을 생활의 필수적 요구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을 매일 밥먹은 것처럼 생활의 필수적 요구로, 습성으로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42) 김일성,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1970.2.17),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17.

43) 김재영 외,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서울: 형설출판사, 1990), pp. 386~387.

44) 「로동신문」 (1985.12.18).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학습은 정치이념을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뿐 아니라, 반체제적인 정치정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반복학습을 위하여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각종 사회조직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김일성·김정일의 ‘로작’을 암송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⁴⁵⁾

둘째, 취학 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1947년 6월에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보건국령 제5호」로서 「보육원 규정」을 발표할 정도로 취학전 교육을 중시하였으며, 현재 북한은 유치원교육의 일부분을 의무교육화하고 있다.⁴⁶⁾ 취학 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들로부터 보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취학 전 교육을 통하여 조기에 정치이념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킬 수도 있다.

셋째, 북한정치사회과정에서는 이론교육보다 실천이 강조된다.⁴⁷⁾ 교과과정에는 노동이 포함되어져 있어 학생들은 노동자계급 의식을 직접 경험하며, 군사훈련도 받고 있다.⁴⁸⁾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혁명유적지’ 참배나 행군등을 통하여 지배이념을 체득하게된다. 이러한 실천적 정치사회화는 단순한 이론교양보다 정치이념의 확산과 심화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문학·예술을 통한 사회화를

45) 안드레이 란코프, 「평양의 지붕밑: 소련 레닌그라드대 란코프교수의 북한생활 체험기」(서울: 연합통신, 1991), pp. 109~110.

46) 북한의 취학전 교육에 대해서는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백사, 1990), pp. 361~378; 하숙, “북한의 취학전 및 초등교육,” 황징규 외,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1990), pp. 78~98 참조.

47) 온만근,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와 결과분석,” 통일원,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 '92 북한·통일연구논문집 (5) (서울: 통일원, 1992), pp. 29~30.

48) 도홍렬, “북한 청소년 사회화의 실태,”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권 4호 (1978), p. 123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문학·예술을 포함한 문화활동이 당에 의하여 통제 받는 것은 북한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특히 영화는 김정일이 직접 제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요한 작품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해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학습의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여가활동을 통해서도 정치사회화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정치사회화의 내용이 국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였다. 건국부터 한국전쟁이전까지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라는 구호 하에 반제·반봉건적 애국민주사상을 강조하였으며, 1950년대까지는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당성제고가 강조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계관과 집단주의 정신 그리고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교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통일을 강조하고 있다.⁴⁹⁾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사회화에 비해서 북한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정치사회화의 방법보다는 내용에 있다. 즉 북한체제가 처해있었던 조건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따라 내용을 변화시킨 결과 정치사회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체제유지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상적 통제를 위하여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이 당 및 각종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회의들이다. 북한 주민들은 1일 평균 1~2시간의 회의를 치른다. 각급 당 전체 총회와 위원회,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총회와 위원회, 직업동맹 회의와 위원회, 농업근로자 동맹 총회와 위원회, 여성동맹 총회와 위원회, 기타 사회단체 총회와 위원회,

49) 강성운,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55.

각종 학습회, 사상 검토회, 영화 및 연극 감상회, 소년단 회의, 소년 선봉대 회의, 협동농장관리위원회와 총회, 작업반 및 분조회의 각종 보고회 및 군중대회 등이다(〈표 2〉참조).

〈표 2〉 집단별 참석회의

노 동 자	직업동맹회의, 당총회, 당분조회, 당학습회, 직장통회, 작업반 회의, 기타학습회, 사상검토회의, 영화 및 연극 감상회, 인민반 회의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원	청년동맹 분조회, 청년동맹 학습회, 직장총회, 작업반회의 작업반 분조회, 기타 학습회, 사상검토회, 영화 및 연극 감상회, 인민반 회의
농 민	당총회, 분조회, 농업근로자동맹 총회, 당(또는 사회단체) 학습회, 협동농장 총회, 작업반 회의, 분조회의, 기타 학습회, 사상검토회, 영화 및 연극 감상회

* 이항구, 「분단 44년, 북한의 현실」(서울:신태양사, 1988), p. 257 참조

각종 당회의에서는 당 내부의 문제를 토의·결정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구·사법기구·입법기구의 문제와 비당원들의 문제 등도 전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회의이고,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회의는 당의 청소년들을 교양하여, 당이 제시한 노선과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에 동원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여맹회의는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포함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당이 제시하는 노선과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회의이고, 직업회의는 직업을 가진 군중들을 결성하여 “당과 노동계급 간의 연계를

보장하는 인전대로서 당의 지도하에 군중을 관장하며 당 주위에 묶어 세우며 그들을 혁명과업 수행에 적극 동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근맹회의는 “당의 농업정책 관철에 농장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 속에 집단주의 정신을 부식하며 농장원들을 당에 무조건 충실한 혁명투사로 교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상검토회는 당 및 사회단체에서 비공산주의적 사상을 뿌리뽑기 위하여 참가자들의 사상을 비판 또는 자기 비판하는 형식으로 검토하는 모임이다. 일일사업총화는 일반사무직장에서는 부서별로,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또는 분조별로 각 개인의 하루 사업결과와 작업반·분조·부서의 하루 사업결과를 평가 분석하는 모임이고, 군중대회는 어떤 일정한 목표로 군중들을 선동하거나 동원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군중들을 모아놓고 가지는 행사이다. 군중대회의 형식은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군중의 집합, 주석단 인원의 등장, 특정 인물의 보고, 미리 지명한자들의 토론, 결의문 채택, 가두시위 행진, 해산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통례이다.

각종 학습회의는 노동자·사무원·청소년 학생들 속에 진행되는 것으로서 김일성주의 학습회, 김정일 덕성학습회, 당역사 연구반 학습회, 당 정책 학습회, 회상기 학습회, 수령의 약전(略傳) 학습회, 신문 독보회 및 시사토론회, 기타 당 지시로 학습회가 있다. 영화·연극감상회는 집단으로 관람한 연극·영화에 대한 토론회이며, 군인 집회는 군인들이 참가하여 진행하는 집회로 부대 주요임무 착수 전 임무의 성과적인 완수를 위한 문제, 긴급한 명령·지시에 대한 부대 이동의 무사고 보장문제 등을 토론한다.⁵⁰⁾

사상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북한에서는 끊임

50) 이항구, 「분단 44년, 북한의 현실」, pp. 237~267.

임없이 체제위기감을 조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연중행사의 하나인 팀스피리트와 관련된 것이다. 남한과 미국의 합동군사 훈련이 팀스피리트가 실시되면 전군에 동원령과 비상대기령을 발효하고, 팀스피리트가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핵실험 전쟁연습이라고 선전한다.⁵¹⁾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팀스피리트 기간 동안 주민들의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하고 있다. 위기감의 조장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이념적 통합을 제고시키는데 일조 한다.

나. 차별적인 대우: 계층정책

북한 사회통제 기제에서 중요한 하나는 차별적인 사회적 대우를 특성으로 하는 계층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헌법 제65조) 외형상 모든 주민의 평등한 권리 향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이 헌법상 규정된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북한에서 실시한 출신성분 구분작업으로는 1958년 12월~1960년 12월에 실시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그리고 1980년 4월~1980년 10월에 걸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 1981년 1월~4월에 걸친 ‘복숭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1983년 11월~1984년 3월에 걸

51) 「조선중앙통신」(1990. 2. 28).

친 주민증 갱신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80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실시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에서는 13개의 부류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3〉 주민성분 조사사업

사업명칭	시 기	내 용
중앙당 집중지도	'58.12~'60.12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이주
주민재등록	'66.4~'67.3	100만 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을 분류(직계 3대·처가와 외가 6촌까지 내사)
3개 계층 51개부류로 구분	'67.4~'70.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재분류
주민요해사업	'72.2~'74	남북대화와 관련, 주민동태를 조사·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공민증 검열사업	'80.1~'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80.4~'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개일교포 요해사업	'81.1~'81.4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파악화
공민증 갱신사업	'83.11~'84.3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 출처: 통일원, 「'95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5), p. 275.

〈표 4〉 3계층 51개부류 분류표

3계층	51개부류
핵심군중 (전체인 구의 28%)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당·정·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반일투쟁에서 희생된 자의 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6·25 당시 비전투원으로 희생된 자의 유가족), 혁명인텔리(8·15 이후 북한이 양성한 인텔리), 6·25 당시 피살자 가족, 6·25 당시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인민군 현역장병의 가족), 영예가족(6·25 당시 부상한 상이군인)
기본군중 (45%)	중·소상인, 수공업자,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접객업자, 무소속 남한출신, 월남자 가족(제1부류),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제2부류), 월남자 가족(제3부류), 중국귀환민, 8·15이전 인텔리, 안일·부화·방탕한 자, 접대부 및 미신 송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복잡군중 (27%)	8·15 이후 중소기업가·부농·상공업자에서 전락된 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행위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복무자, 체포·투옥자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개인재산을 완전 몰수당한 자본가

* 1970년 당시 주민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한 것임.

* 출처: 통일원, 「'95 북한개요」, p. 268.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분류 세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민족자본가나 지주 등은 현재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별로 새로운 사회집단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정일이 통치자로서 모습을 드러낸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성분완화정책의 시달에 따라 당시의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부류를 폐지 내지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전 주민을 크게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층), 복잡군중(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귀순자 박창덕(1998.2 입국)과 이정옥(1998.2 입국)은 북한의 성분구별정책 내지 계층분류는 정치적·사회적 지위와 직업·결혼 등의 중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은 사석에서 자신들을 가리켜 '인민'보다 '백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당·정간부들을 '양반'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 바 있다.⁵²⁾

핵심군중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 전체주민의 약 28%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김일성·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과 약 20만 명(인구의 1%)으로 추산되는 고급간부들, 그리고 나머지 26~27%의 중·하위급 간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항일혁명투사와 그 가족, 한국전쟁시 피살자와 전사자의 유가족들이다. 북한은 핵심군중의 자녀들을 위해 각종 특수학교와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고급간부들은 호화주택에 살면서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최신 유행품 등을 소유할 수 있다. 자가용, 개인전화도 소유하고 있고, 외국출판물도 구독하며, 외국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면서 당·정·군 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고, 진학·승진·배급·거주·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를 누리며 세습 신분집단을 이루고 있다.

52)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8.5.15.

기본군중은 북한체제의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하고 있으며, 극도로 제한된 수입과 배급식량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는 이들은 불충분한 보건 혜택 속에 특별허가 없이는 평양을 여행하지 못한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핵심군중으로 신분이 상승하기도 한다. 복잡군중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집단이다. 복잡군중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7%를 차지한다. 이들은 과거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일제시 공직자 가족, 중

〈표 5〉 성분 분류표

특별계층	혁명열사유가족·애국열사유가족(1~2%)
핵심군중	노동당원, 전사자가족(전사가 확인된 경우), 영예가족, 후방가족, 고농, 빈농, 사무원, 노동자
기본군중	노동당원, 사무원, 노동자, 영예가족, 전사자가족, 남한출신(의용군입대자), 신인테리
복잡군중	인테리, 남한출신(입북자·피난민), 포로귀환병, 월남자가족, 중·소상인·수공업자 출신, 중국귀환민 출신, 과거 접대부·미신송배자 가족, 유학자·지방유지 출신, 경제사범, 구인테리
감시대상	과거 지주·중소기업가·부농 가족, 과거 친일·친미 행위자 가족, 과거 적기관복무자 가족, 종교인출신 가족, 출소자, 출당자, 철직자, 체포·투옥자 가족

* 귀순자 이순옥의 증언에 의거하여 작성.

종교인 및 부역자 가족, 당원자격을 박탈당한 자, 간부에서 철직된 자, 체포 및 투옥자 가족, 정치범 출소자, 경제사범,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등 북한의 권력투쟁에서 희생당하거나 소외된 엘리트와 관료 출신 등으로 대학진학, 입당, 군장교 등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탈된다.

출신성분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성분정책은 기본군중의 사회적 진출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성분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류는 역시 복잡군중에 속한 사람들이다. 귀순자 이순옥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분기별로 초급당비서, 부비서, 세포비서 등이 성분심사를 하고 있으며, 성분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다(〈표 5〉 참조). 일반적으로 당원, 노동자, 사무원, 전사자가족, 영예군인 등은 그 기준에 따라 핵심군중이나 기본군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혁명인테리는 기본군중 또는 복잡군중으로 분류되고 있다.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용·교육·주거·의료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 및 독재의 대상, 항시 동태를 감시당하는 고립대상, 집중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체제순응적으로 교육받는 포섭 및 교양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북한은 성분에 따라 교육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실력이나 본인의 의사와는 거의 상관 없이 지방대학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중앙당 부장, 내각 각료 등 김정일의 측근이나 소위 간부 자녀는 무시험 특별입학이 허용된다. 한편 김일성종합대, 김책공대 등 주요 대학의 입학 예정자는 직계존비속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의 입학예정자는 직계존비속 4촌까지 성분조사를 받는다. 성분조사 과정에서 작은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된다. 입학이 취소

〈표 6〉 복잡군중 분류표

독재대상	독재대상자는 현재 북한체제와 제도를 전복하려는 부류로 이들은 일반 주민들과 분리시켜 소위 '안전지대'로 불리우는 산간고지와 탄광지대 등 특수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있음.
고립대상	고립대상자는 상당히 위험한 대중으로서 일단 유사시에는 남한에 동조 내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들이며 일반군중에 공개하여 집단 감시케 함.
포섭대상 및 교양대상	포섭대상자들은 일부 동요계층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탈정도가 경미하여 체제·이념에 다시 순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류이며, 교양대상자들은 사상교양을 강화하면 전향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보는 유동적인 부류임.

된 남학생은 군대에 입대하여 7~10년간 복무하여야 하고, 여학생은 생산기업소로 배치된다.

연좌제 등 출신성분에 따른 대학입학 통제실상은 많은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실제로 대학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정밀한 신원조사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입학이 허용된다. 국군포로들은 신분상으로 여러 가지 학대를 받고 있는데,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들도 직업과 사회진출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실상 성분차별이 대물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당국은 이같은 성분정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성분정책 완화지침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성분정책으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⁵³⁾ 뿐만

아니라 북한의 차별적 대우는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성분이 우수한 사람들만 평양시민의 자격을 부여받고, 정치경제적으로 월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다. 배급제도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공급은 총체적인 성격을 띠는 공급체계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일체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기준량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로동자, 농민 사무원은 무료나 마찬가지로 가격으로 식량을 배급받고 있으며, 의복도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식주를 해결함에 있어 국가에서 무상으로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과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를 나누는 기준은 대체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즉 북한은 생활용품을 개인 당 구입한도가 정해진 '배정품'과 구입한도가 없는 '자유판매품'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배정품에 대한 중간유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에서 일상 생활용품의 배급 통로는 내각 산하 상업성 → 도출하도매소 → 시·군지구도매소 → 시·군상업관리소 등 4단계를 거치고 있다.

배급체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식량배급체제이다. 북한은 인간의 기본생활을 '식의주'로 표현할 정도로 식량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김정일도 "옷감이나 집 같은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식생활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에 의해 북한에서는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제

를 실시하였다. 식량배급은 통상 15일 마다 실시하며, 각 직장에서 발급받는 양권에⁵⁴⁾ 따라 리·동배급소에서 유상으로 배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상자의 신분, 직위, 지역 등에 따라 배급량, 쌀과 잡곡의 혼합비율 등이 달라진다. 쌀과 잡곡의 혼합비율은 대체로 2대8에서 5대5 사이에서 결정된다. 부식의 경우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등은 공급카드로 구입하고 김치, 두부, 야채 등을 식료품점에서 임의로 구입할 수 있다.

의류의 경우는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구분한다. 중앙공급대상자는 급수에 따라 2~4년에 양복 또는 옷감을 한 벌씩 염가로 제공받는다. 일반공급대상자는 1년에 1~2회 노동용 물자라고 하여, 광목, 포플린 등을 배급한다. 특히 예술가, 당·정간부, 기자, 교원 등에게는 '특별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타 공산품은 구매권과 상품배정표에 따라 공급받는다. 이것들은 연초 각 직장 단위로 배급되며, 국영상점인 지정상점에 가서 구입하게 된다. 하지만 공산품상점이 모든 공산품을 다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TV나 냉장고 따위는 직장단위로 할당되어 특정한 사람에게 판매되는 경향이 있다.⁵⁵⁾

통상적인 배급체계와는 별도로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모든 북한사람들에게 명절상품을 나누어준다. 이러한 상품을 '위대한 수령님의 선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보통 1kg 정도의 당과류와 같은 양의 고기이다.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명절 때마다 선물을 주는데 이것이 '아버지 원수님의 따사

54) 흔히 양표라고 불리는 양권은 식량을 대신하는 증표이다. 발급을 신청하면 목적에 따라 출장용 양권과 가정용 양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출장용 양권은 여행중 식당이나 여관에서, 가정용 양권은 식량배급소나 식료품점에서 국수, 밀가루, 식빵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한다.

55)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공편, 「통일·북한 핸드북」(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6). pp. 139~141.

로운 사랑'이며 이에 '불타는 충성심'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교양한다.⁵⁶⁾

배급제도는 그 자체가 강력한 사회통제의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을 광범위하게 국가가 장악함으로써 배급체제로부터 유리된 주민들은 생존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동시에 배급체제는 배급의 중간과정에 위치하는 작업장이나 사회조직에 주민들을 강력하게 통합하는 고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배급을 위하여 작업장 및 사회조직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는 까닭에 해당조직을 통한 주민통제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밖에 없다. 배급제도가 사회통제에서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사회이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이동이 용이한 경우 정보의 전달이 원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전반적인 배급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이동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급제도는 그 자체로서 사회통제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차별적 계층정책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성분 차이에 따른 차별적 배급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상층집단이 기존 체제에 헌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하층집단은 상층으로의 상승욕구를 자극하여 체제에 복종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 생일의 선물로서 특별식량을 배급함으로써 정치적 상징 조작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중공업중심의 산업화를 추구하여 일상 소비재의 만성적으로 부족한 사회이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는 배급제도가 사회통제 기제로서 갖는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56) 안드레이 란코프, 「평양의 지붕밑: 소련 레닌그라드대 란코프 교수의 북한 생활체험기」, pp. 141~142.

IV. 북한사회통제의 변화

1. 북한 일탈행위의 특성과 변화

가. 북한 일탈행위의 특성

전통적인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범죄를 비롯한 각종 일탈행위를 체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오염' 혹은 '잔재'로서 인식하고 있다. 타락해가고 있는 서구의 부르주아의 영향에 의한 '오염'으로 일탈행위가 일어나거나, 전 시대의 착취적 사회경제형태로부터 청산하지 못한 '잔재'가 일탈의 원인이라는 것이다.⁵⁷⁾ 따라서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일탈행위가 비정기적으로 일어나거나(오염의 경우), 점차 축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야 한다(잔재의 경우).

그러나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통제체제가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포함한 사회문제를 근절시킬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작게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도난·절도·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청소년비행 및 조직 범죄 그리고 크게는 체제에 대한 정치적 도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탈행위와 각종 범죄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일상적이건 정치적이건 간에 범죄나 일탈행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각종 일탈행위들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으며, 각종 범죄행위를 포함한 일탈행위의 성격의 변화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새로운 범죄유형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범죄의 구조

57) 북한연구소, 「북쪽사회 어디에 와 있다」, (서울: 북한연구소, 1986), p. 58.

화 및 조직화는 사회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사범죄의 지속은 사회통제 기제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⁸⁾ 이와 더불어 일탈행위에 대응하여 사회통제기제가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제 기제는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범죄나 일탈행위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범죄를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근로 인민재중에게 위협한 행위인 동시에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주의법을 어기는 위법성 있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으며,⁵⁹⁾ 북한 형법 제9조에서 범죄에 대하여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협한 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죄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범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표 7〉 참조).

여러 가지 범죄 가운데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일탈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정치범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북한형법상 정치범을 처벌하기 위한 죄명으로는 ‘국가전복음모죄’, ‘반동선동선전죄’, ‘조국반역죄’ 등이 있다. 국가전복음모죄는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로 반당·반김일성

58) 신중 범죄의 예로 컴퓨터 관련 범죄를 들 수 있다. 최근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네트워크의 발달과 사이버 커뮤니티의 확대는 컴퓨터 관련 범죄의 확대를 야기하였다. 미국의 마피아의 경우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의 예가 된다. 마피아의 생성이 초기 이탈리아 이민의 증가와 행정부의 보호 부실에서 비롯되었고, 마피아 조직이 구조화되는 데는 WASP(white angelo-saxon protestant) 중심의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가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비행이 줄어들기는커녕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존 사회체제의 대응방식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9) 김근식, 「형법학」(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p. 83.

분자들이 이 죄목에 해당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유배되고 있다(형법 제44조).

<표 7> 북한형법에 나타난 범죄 유형

범 죄	조 항
반국가범죄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제44조~제51조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제52조~제53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제54조~제55조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56조~제65조
사회주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66조~제83조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84조~제91조
사회주의 노동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92조~제96조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제97조~제102조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103조~제123조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제124조~제130조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131조~제140조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공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	제141조~제154조
공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155조~제161조

반동선동선전죄는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 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를 징계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는 주로 해외정보유입을 차단하고 내부동요를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형법 제46조). 초기에는 북송교포 및 월북자와 남북억류자들 중 불평분자들을 처벌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동구 및 구소련 붕괴 이후 내부 단속을 위하여 해외유학생 및 해외근무자나 출장자 중 해외실정을 주위에 유포한 자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되고 있다. 조국반역죄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일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형법 제47조).

정치범을 포함하여 탈북자 등의 증언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사범이다. 북한에는 일반범죄보다 정치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김일성 사진 등 상징물을 훼손하여 북한 체제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나, 당원증이나 맹원증의 분실도 모두 정치범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범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직접 취급하며 재판도 없이 중형에 처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집단 수용시키고 있다. 둘째, 경제사범으로 절도와 암거래 등의 범죄가 이에 포함된다. 셋째, 뇌물범죄로서 직장배치, 생필품 배급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수뢰하는 경우이다. 넷째, 인신침해사범으로 폭행, 상해, 살인 그리고 북한에서 부화사건으로 불리는 강간·간통 등의 성범죄도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30세 이하의 청소년이 저지르는 청소년범죄이다.⁶⁰⁾

강력한 사회통제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주로 경제사범과 인신상해범인 잡범이 적지 않다고 하며, 검거된 도둑의 인상

60) 이진중·이경렬,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연구」, pp. 114~122.

의와 범죄사실이 명시된 게시판 앞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안단속을 당부하고 수상한 자의 신고를 당부하기도 한다고 한다.⁶¹⁾ 그리고 이들을 가리키는 은어도 있다(〈표 8〉 참조). 북한에서 실제로 소매치기와 도둑질에 간여해왔다는 탈북자 조용호씨에 따르면 학교에서 각종 비행을 저지르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소매치기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잡히는 경우 정식으로 법적 제재를 받기도 하지만 사소한 범죄들은 일반주민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마는 경우가 많으며, 후안전원에 인계되더라도 청소년인 경우 훈방되거나 학교로 돌려보내지는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표 8〉 북한형법에 나타난 범죄 유형

소매치기	꽃 제 비
강간범	호 씨 꾀
쓰리꾼	뚜 록 꾀
밤에 돌아다니는 불량배	야 생
깡으로 사는 사람	깡 꾀 이

* 월간조선 편집부 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p. 139 참조.

그러나 일반 잡범들과 달리 일정한 조직을 갖춘 조직범죄도 존재한다고 한다. 남포에 살았던 한 귀순자에 따르면 남포시내의 한 개 구역에 황소패, 짝패 등으로 이름 지워진 서너 패 이상의 조직 깡패

61) 「내외통신」 45권 (1992.1.31), p. 291.

들이 활개치고 있었다고 한다.⁶²⁾ 또한 탈북자 조용호씨도 지역별로 어느 정도 조직화된 범죄조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은 평양지역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평양꼬마 즉 '평꼬'로 불려졌으며, 사리원 꼬마, 함흥꼬마 등 지역별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며, 남한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의 조직강패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한 유대를 갖고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지역에 원정 가는 경우 해당 지역의 '꼬마'들이 절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침식을 책임지는 등 편의를 돌보아 주었다고 한다.

강패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견해가 있다. 일부 탈북자들은 성분이 좋지 않아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들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좌절하여 강패생활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⁶³⁾ 실제로 범법자 생활을 하였던 조용호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은 비교적 성분이 좋았지만, 학교 생활 등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생시절부터 '꼬마'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도 다시 범죄 행위를 지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배경을 일반화시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북한일탈 행위의 변화 양상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

62) 탈북자 김선일의 증언. 월간조선 편집부 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pp. 138~139.

63) 탈북자 김선일의 증언. 월간조선 편집부 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p. 138.

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각종 절도와 같은 경제사범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생필품 등의 절도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절도한 물건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장물아비도 출현하였다고 한다.⁶⁴⁾ 암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최근의 현상이다. 비누·치약·술·담배·신발 등 생필품이나 기초적인 기호 식품을 포함하여 고춧가루·술·도토리묵 등 기초 식품도 암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집단적인 수준의 절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난으로 식량배급 중단이 장기화되자 군인들과 주민들은 식량 운반자들을 위협하여 식량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⁶⁵⁾

일반 절도 사건이 아니라 당·정부·군부 등 국가기관의 부정부패 사범도 급증하고 있으며, 탈북자 대부분이 김정일 시대에 부패가 더욱 심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뇌물공여와 수수로 대표되는 부정부패 사범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험문제 유출, 직장배치, 교육회피 등 일상적인 이해관계를 미끼로 담당자의 뇌물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고위직에 있는 당료나 관료의 부패도 증가하고 있는데 금수산의사당경리부 당책임비서가 대성담배공장에서 담배 1차분을 빼들려 시장에 팔아먹은 사례가 있

64) 이건중·이경렬, 「남북한 사범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연구」, p. 116. 최인섭,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예비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1호 (1992. 4). p. 268.

65) 식량 탈취자들은 군인들이 대부분이며 일반주민들 중에도 5~6명씩 패를 지어 탈취행위를 하고 있다. 군인들은 식량을 실은 차량이 지나가면 길을 가로막고 차위에 올라가 식량을 내리고 휘발유까지 탈취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마스크와 복면을 한 채 언덕을 오르는 식량운반 차량을 덮쳐 운전자와 호송자를 위협, 대기해 둔 차량에 식량을 옮겨 싣고 도주한다. 이처럼 식량 탈취 사건이 빈발하자 식량을 운반하는 기관, 기업소측은 총기까지 휴대하고 식량을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4),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을 정도이다.⁶⁶⁾ 인민무력성에서도 대좌에서 장령 승진에 뇌물이 필요하며 출장 온 중앙간부에게 지방간부들이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한다.⁶⁷⁾ 뇌물공여는 물리적 통제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 등의 직원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⁶⁸⁾

범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기초적인 사회규칙을 어기는 일탈 행위도 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불법화된 전자오락이 유행이고, 복장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어른들은 출근을 거부하면서 배가 고파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의 일종의 태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심한 경우 직장배치에 불만을 갖고 출근을 거부하다 노동단련대에 수용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있다. 직장에 나가는 경우에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노동자들이 공장 당비서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⁶⁹⁾ 경제난으로 식량을 구하는 일이 시급하고 졸업 이후에도 좋은 직장을 얻을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학생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중퇴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이와 같은 범주의 일탈행위에 들어간다.⁷⁰⁾

마찬가지로 범죄의 범위에 들지는 않지만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속한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경

66) 탈북자 김영립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0. 19).

67) 탈북자 유광일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0. 13).

68) 탈북자 정현수·서현자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 (1999. 1), pp. 62~63.

69) 탈북자 박정철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0. 20); 탈북자 석영환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5. 20).

70) 원칙적으로 자퇴를 하기 위해서는 질병과 가정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학교 당국은 등록된 학생의 규정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자퇴 승인에 인색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퇴하기 위해서 대학당국에 뇌물을 쓰기도 한다.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8. 12),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북한연감 2000」.

향도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도 집단 우선의 기본 가치관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가장 집단적인 가치가 우선해야 할 병사들도 돈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⁷¹⁾

보다 심각한 일탈행위는 북한의 주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이다. 군입대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데, 최근 북한 주민들은 군대에 입대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군복무 기간도 길어 제대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의 군대 입대를 기피하고 있다.⁷²⁾ 또한 식량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노동자들은 기업소나 기관의 양해아래 식량지원비를 제출하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범죄와 일탈행위의 조직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의 깡패조직

71) 병사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을 보면 다양하다. 농촌지원 나가서 농장원들과 결탁하여 가을 수확기에 농작물을 일부 빼내 은닉해 두었다가 내다 팔아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해안경비대 병사들은 '통제구역'에서 주민들이 조개잡이를 할 수 있도록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 돈을 모으고 있고, 국경경비대 병사들은 중국지역을 오가는 장사꾼들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다. 그외 특별한 권한이 없는 병사들은 대부분 인근 민가의 농작물을 절취하여 장마당에 내다 파는 방법 등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12),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72) 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입대를 기피하는 이유는 군복무가 자녀들의 장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군대에서 영양실조와 간염 등으로 조기 제대한 병사들이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기피사유이다. 두 번째로는 젊은이들이 개인장사 등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벌이와 가정생활을 꾸려가야 하는데 13년 씩 군복무를 하면서 아까운 청춘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입대를 기피하는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일반적으로는 고등중학교 졸업 후 해당 시·군 인민병원에서 받게 되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인민병원 과장이나 군사동원부 간부들에게 돈과 물건 등의 뇌물을 건네주고 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요인이 되는 시력·간염·위궤양 등에 걸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기발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12),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보다는 조금 더 조직화된 폭력조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함북 회령시의 경우 '길동이' 등 보스의 이름을 딴 폭력조직이 조직원 20에서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이권에 개입하고 장사꾼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유형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보위부나 안전성과도 결탁하여 일정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한다.⁷³⁾

경제범이나 뇌물사범과 같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정치사범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탄광이나 광산지역에는 김정일 체제나 통치 행태를 비난하는 낙서, 전단살포 사건이 일어나는 등⁷⁴⁾ 체제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 일탈행위의 양상이 전사회적인 차원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북한체제에 접근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부득이 탈북자에게 북한현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으나, 탈북자 자신들이 일탈행위자로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북한내 일탈행위의 양상이나 정도를 부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최근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최근 북한 일탈행위의 특성을 대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핵심군중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농민뿐만 아니라 당간부까지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 간부들도 재산 축적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북한 간부들은 직접 장사에 나서기가 어

73) 탈북자 김명섭·김영임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1999. 2), pp. 62~63.

74) 1995~97년 사이 탄광 및 광산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함북 무산광산에서는 1997년에 김정일체제로는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내용의 전단이 광산내 벽에 부착
 ② 함남 고원 탄광에서 3~4회에 걸쳐 김정일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전단 살포
 ③ 함남 검덕광산에서 5~6회에 걸쳐 노동자들이 "김정일이 철조망 정치를 한다"는 내용의 전단 작성 살포. 탈북자 이용자·이명숙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1998. 11), pp. 62~63.

렵기 때문에 자신들을 대신해서 장사해주는 '뇌물전문 장사꾼'을 활용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⁷⁵⁾ 이것은 사회통제체제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기관 소속 사람들마저 일탈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제담당자의 일탈행위는 사회통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사회통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경제사범의 증가는 물론이고 뇌물사범 그리로 사소한 규범 위반에 이르기까지 최근 북한 일탈행위의 배후에는 경제난과 식량난이 있다는 것이다. 절도와 같은 경제사범은 식량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학교를 중퇴하거나 직장을 가지 않는 것도 배급체제가 붕괴된 까닭에 정당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폭력조직 등에서는 일부 조직화 경향이 보여지지만 대부분의 일탈행위가 여전히 개인중심이고, 구조화되기보다는 일회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절도 사범이나 뇌물사범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개인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75) 간부들이 장사하는 주요 목적은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퇴직 후 생계유지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로 '뇌물'로 받은 물건들을 장사꾼에게 건네주고 판매토록 하고 있다. 간부들은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장마당 등에서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들을 소개받아 위탁판매를 부탁한다. 간부가 "물건을 판매해 줄 경우 일정비율의 이윤을 주는 한편 돈이 필요할 때는 돈도 빌려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대부분의 장사꾼들은 큰 밀천 없이 장사수완만 좋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 장사를 시작한다. 이때 주요 판매품목은 담배, 술, 의류, 신발, 식량 등 생필품이며 간부가 제시한 가격에 2~3배정도 더 붙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한편 간부들은 장사꾼을 선택할 때 자신이 장사한다는 말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친인척이 간부로 있거나 집안배경이 좋고 말을 옮기지 않는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주민들이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으며, 간부들은 아무거나 잘 받아먹는다는 의미에서 '만능 분쇄기' 혹은 다 빼앗아 먹어 배가 크다하여 '군함', '자루' 등으로 부르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1999. 7. 10).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연계성을 갖고 사회적 저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부 등에 대한 불만을 고조되고 있으나 체제에 대한 불만은 뚜렷하지 않다.

넷째, 일탈행위의 증가가 식량난과 경제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의 차이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김정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지지하는 정도는 김일성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식량난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⁶⁾

다섯째, 꽃제비가 상징하고 있듯이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 세대가 일상적인 일탈행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를 중퇴한다든지 패거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식량난으로 해체된 가족의 아이들은 북한내에서나 탈북해서 꽃제비가 되는 등 청소년 집단은 스스로의 의지에 상관없이 사회적 일탈자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⁷⁷⁾

76) 특히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김정일이나 당간부에 대한 비판적이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폭동진압장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 김영립·전혜숙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1. 22).

77) 최근 북한에서는 청년층의 동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도 신년공동사실에 청년보가 누락되었으며, 북한 내부에서도 청년층의 사상적 동요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25일 발표된 논문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와 1996년 8월 24일 발표한 담화 "김일성 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라는 글에서 김정일은 청소년 학생들의 움직임이 북한사회 통합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북한연감 2000」(서울: 연합뉴스, 1999), p. 515.

2. 북한사회통제체제의 변화

현재 일탈행위의 증가는 질과 양에 있어서 북한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수준의 각종 일탈행위가 경제난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초래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동일유형의 일탈행위가 반복될 것이며, 이는 곧 일탈행위가 구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도 경제사범이나 뇌물사범의 경우는 어느 정도 구조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구조화된 일탈행위는 사회적 불만과 결합하여 체제저항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통제기제는 여러 면에서 그 기능이 저하되어 일탈행위 감소나 예방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공안기관인 사회안전성·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범법자들과 상호 뇌물을 주고받는 등 공생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권위가 추락, 범법자들을 검거하더라도 엄격한 처벌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치안이 문란해지면서 안전원이나 보위부원에 대한 보복행위가 많아 이들 스스로 범법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기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이다.⁷⁸⁾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일탈행위는 단순히 개별적인 사회통제기제의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전체

78) 주민들은 국가에서 발표하는 각종 '포고'에 대해서도 포고발표가 너무 잦아 포고내용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늘상 있는 '지시문'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다. 치안을 담당하는 안전원들도 일반철도와 폭력, 강도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일들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통제가 전반적으로 이완되고 법질서가 문란해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사회 법질서를 믿을 수가 없다. 내 몸과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호신용 도구를 휴대하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11),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적인 통제체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식량 부족으로 배급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식량의 자급을 허용하면, 일차적으로 배급제도가 갖는 사회통제 기능이 상실된다. 뿐만 아니라 식량배급을 위하여 직장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개인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사회조직이 갖는 통제기능의 저하가 동반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회통제체제가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통제기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분적인 통제기제의 기능상실이 다른 통제기제의 기능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체 통제체제의 효율성 저하로 귀결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북한의 지도층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사회통제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물리적 통제기제의 강화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통제 체제의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기존의 물리적 통제기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리적 억압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권위주의체제가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가장 먼저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현재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물리적 통제기구간의 위상 변화이다. 길게 보면 1982년에 물리적 통제기관의 연결망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 위원회의를 구성한 것도 물리적 통제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특히 사회통제에서 군이 갖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등 통제기구간의 위상설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사회 통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인민무력성 내부의 보위사령부이다.

인민군 보위사령부는 1945년 북한군 창군 당시 만들었던 안전기관(정보기관)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68년 인민군 정치안전국, 1970년 인민군 보위국 등의 이름을 거쳐 1995년 말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경비총국(국경경비대)이 인민무력부에 배속될 당시 보위국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⁷⁹⁾ 보위사령부는 1996년부터는 과거 사회안전성이 시행하던 기차내 검열을 담당하고 있으며,⁸⁰⁾ 두만강과 압록강 국경선의 경비초소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 동안 노동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에서 실시하던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도 최근 보위사령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⁸¹⁾

또한 북한 당국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성은 비리세력과 깊이 결탁되어 있어 정확한 검열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간부들에 대한 검결기관을 군보위사령부로 선정하였다.⁸²⁾ 군요원이 단위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되어 있으며, 각 대학에도 군요원을 상주시키고 대학생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에도 군이 직접 나서고 있다.

79)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조직과 활동," http://www1.yonhapnews.co.kr:81/cgi-bin/SRCH_KOR/Kor_Srch?TYPE=5&LINE=0045&OFFSET=10028&FROMDATE=19990731.

80) 탈북자 유광일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0. 13); 탈북자 한태철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0. 15).

81) "북, 재외공관 감사 군보위사령부 담당," http://www1.yonhapnews.co.kr:81/cgi-bin/SRCH_KOR/Kor_Srch?TYPE=5&LINE=0027&OFFSET=10472&FROMDATE=19990818.

82)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1).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둘째, 일탈행위자 및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공개처형의 확대이다. 최근 탈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공개처형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사회안전성에서 '살인자 및 누범자, 재범자 등에 대해 극형을 처할것에 대하여' 라는 제의서에 근거하여 공개처형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공개처형의 대상도 살인 및 살인 미수자, 상습절도범 그리고 강도 재범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⁸³⁾

처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등급도 상향조정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단순 경제사범이었던 외화은닉 사범을 정치사범으로 취급하고 있으며,⁸⁴⁾ 절도범들도 정치범과 같이 취급하여 집단거주지역을 설정하여 별도로 수용하고 있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탈북자도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있다.⁸⁵⁾

셋째, 특정한 분야와 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정치적 불만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명절에 술을 먹는 것도 금지시키고, 다음날 출근하면 명절의 상황을 조직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1990년부터 명절 때가 되면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 지시문을 하달하여 특별경비주간으로 선포하였

83) 북한 당국 공개처형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다. 공개처형의 종류는 '총살형'과 '교수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과거에는 강둑이나 다리 밑에서 처형하였으나, 최근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마당이나 역전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처형 대상자들은 좀도둑에서부터 간첩혐의자까지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 없이 실시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1999. 4),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84) 1995년도 12월 달리를 은닉하는 자는 당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김정일의 친필 서한 이후 이들을 경제사범이 아니라 정치사범으로 취급하고 있다. 탈북자 김영립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0. 19).

85) 강원도에 도둑마을을 설정하고 절도범 50세대를 강제 이주시켰다고 한다. 「내외통신」 45권 790호 (1992. 4. 9). p. 320.

고, 이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사회적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염려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⁸⁶⁾ 또한 신의주, 혜산 등 변방지역의 큰 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위부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⁸⁷⁾

최근에 북한에서 통제대상으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청소년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2월에는 1981년 10월 7차 대회 이후 12년만에 사로청 대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1996년에는 사로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하였고, 1998년을 '대학생 교양의 해'로 설정하고 대학생들에 대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직접 청년협주단 경축공연을 관람한다던가, 김일성대학의 농구경기를 관람하는 등 청년들과 관련된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김정일의 문헌집 '주체의 청년운동과 청년들의 임무'를 발간하는 등 청년층의 정치적 지지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⁸⁸⁾

나. 차별적 보상정책과 사상교양의 정비

사회통제체제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차별적인 보상정책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차별적인 계층정책을 사회통제의 기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과 식량난 등으로 사회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차별적 보상의 대상을 보다 특화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받는 사람들은 군인, 보위부원 및 사회안전원과 같은 물리적 통제가

86) 탈북자 한태철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0. 15).

87) 탈북자 한태철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0. 15).

88) 「북한연감 2000」, pp. 515~516.

관의 성원들이다. 이들에게는 식량난으로 일반 주민들에게는 정상적인 배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배급량의 10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⁸⁹⁾

물리적 통제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위기국면에서 통제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통제의 실질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통제기구의 구성원들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물리적 통제기구들이 현재는 김정일체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체제유지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자체 무력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서 잠재적으로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다.⁹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보상과 더불어 사상교양체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요하고 있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사상교양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선전선동의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인 문학예술 정책도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이광수를 포함하여 카프계열의 작가들을 대폭 해급하여 문학예술의 폭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악기를 수용하여 경음악단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선전·선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문학예술 정책을 변환시키고 있다.⁹¹⁾ 또한 '고난의 행군정신', '붉은기 사상',

89) 탈북자 석명환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5. 20).

90) 북한 지도층은 구소련 10월혁명이 흑해함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도 물리적 통제기관에 대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탈북자 김영립·전해숙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1. 22).

91) 1990년대 초에 개방적인 문예정책을 지향했으나, 1994년 김일성 사후에는 다시 보수적인 문예정책을 펴고 있다.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50~65.

'사회주의 강행군'과 같은 새로운 정치적 구호를 만들어 사상교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 변화를 수용하는 통제정책의 탄력적 운용

북한은 한편으로는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1993년부터 “기본 균중뿐만 아니라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 경위가 복잡한 균중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로 표현하고 있다.⁹²⁾ 이러한 정책이 구체화된 예가 일부 계층정책에 대한 완화조치이다. 북한의 계층정책 변화는 전통적인 북한의 차별적 계층정책이 선도적인 일부 사회집단을 사회발전의 중추적인 세력으로 나서도록 하는데 효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적지 않은 사회불만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1985년경부터 김정일의 지시 하에 성분완화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남한출신이나 교포 그리고 월남자 가족들을 당에 입당시켜주고 있다.

현실을 수용하는 정책의 하나는 장마당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양시 대동강구역에만 사동, 문수산 등 4개의 장마당이 있으며, 주민들이 일상생활 용품의 50%까지 장마당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한다.⁹³⁾ 물론 최근 북한당국은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만연하자 1999년 초부터 북한전역의 장마당을 폐쇄하기 시작하였으나,⁹⁴⁾ 장마당의 허용은 식량난과 배급체제의

92) “인덕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주의 만세.” 『로동신문』 (1993. 1. 28).

93) 탈북자 김영림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0. 19).

94) 장마당 통제관련 당국은 “국가상업망을 통해 유통되어야 할 물품들이 대규모 장사꾼을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일이 많아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붕괴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사회통제에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엄격히 통제하였던 성적 표현을 포함한 성적욕구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눈을 감아주고 있다고 한다.⁹⁵⁾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조식을 이탈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생활총화에만 참석하면 된다.⁹⁶⁾

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마당을 통해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확산, 주민들이 시장경제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데 더 큰 의도가 있다. 장마당 폐쇄조치 이후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과 군대까지 합세하여 매일 장마당의 장사꾼들을 단속하고 있다. 경공업품·쌀·의류 등 모든 물품을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장마당에서 물건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모두 회수하여 장마당 한가운데 쌓아 놓고 불 태워 버린다. 또한 각종 교육·선전수단을 통해 "장마당이 사회주의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장사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자 주민들은 "국영상점에 가서 사려고 해도 팔지 않고, 그나마 개인적으로 알아서 돈주고 사서 쓰겠다는 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배급도 안주고 장사도 못하게 하면 무얼 먹고살란 말인가?", "장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사람을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꼭대기가 배부르니까, 아래도 배부른 줄 아냐?"라며 원망하는 소리가 높다. 이러한 반발로 인해 당국은 7월말부터 쌀·조·수수 등 곡식과 담배·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다시 허용해주고 있는데 주민들은 생계유지가 힘들어 대체수단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12),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95) 탈북자 석영환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5. 20).

96) 탈북자 한태철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5. 18).

V. 북한 사회통제의 평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였거나 자본주의를 대폭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현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통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북한의 사회통제 기제들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사회통제기제가 적절히 작동하였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사회통제기제나 통제정책 자체가 효율적이었다는 것이고 둘째, 사회통제기제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통합에 참여하게 하는 내외적 조건이 갖추어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통제의 구조적 특성과 이것이 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사회통제의 구조적 특성

북한의 사회통제 기제는 강력한 물리적 억압기구의 존재, 이념교육과 사회조직을 통한 사회통제 등 사회주의 국가 사회통제의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 사회통제 기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사회통제는 기본적으로 김일성 유일체제의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물리적 통제기구의 핵심이라고 하는 법에 대한 북한의 해석을 보면 이러한 점이 뚜렷해진다.

우리나라의 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의 법은 수령님의 정치법률사상을 구현하고 있으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 보위하는 것을 첫째가는 사명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과 의사를 옹호하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며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반항을 진압하고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복무한다.97)

북한의 사회통제체제는 통제체제가 지배집단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비판이론가들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 이론가들에 따르면 자본주의체제에서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며 통제체제는 지배계급의 이해를 구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인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소련 스탈린체제에서 사회통제체제가 스탈린 개인에 대한 권력집중에 기여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도 사회통제의 일차적 목표가 사회주의체제나 당적 지배의 유지가 아니라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통제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알튀세르가 이야기하는 물리적 억압과 이념적 억압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조직과 배급제도 등 여러 차원의 기제들이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의 사회통제가 동원되고 있다는 것

97) 「정치사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389~391.

은 사회구성원들에 대하여 복합적인 경로를 통한 사회통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이면서 당원인 주민인 경우, 당조직으로부터 당적 통제를 받으면서 직맹의 조직 통제를 받고 있으며, 거주지에서는 인민반을 통한 통제에 노출되어 있다. 각종 조직에 의한 중첩적인 사회통제와 더불어 출퇴근 시간이나 여가시간 등 일상생활에서는 사회안전성의 통제범위에 들어있고,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위부의 통제대상이 된다. 또한 직장에서 수령하는 배급식량에 의하여 배급제도의 통제구조에 편입되어 있으며, 감상하는 영화나 읽고 있는 각종 문학작품을 통하여 사상적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뿐 아니라 조직에 대한 통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방행정조직인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해당지역의 지방당위원회뿐만 아니라 상급당위원회, 중앙당위원회의 통제 감독을 받고, 행정적으로 해당지역의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상급 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상급행정경제위원회, 정무원의 결정·지시를 집행함으로써 다중적인 통제에 놓여있었다.⁹⁸⁾

다양한 통제기제의 존재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복합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입고 있는 복장과 추구하는 머리스타일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으로부터⁹⁹⁾ 정치적 반대운동과 같은 집단수준의 행위까지 통제의 범위에 들어간다. 탁아소부터 시작되는 교양은 학교교육을 거쳐 거의 매일 지속되는 회의들로 이어져 통제의 영속화가 이루어지고 있

98) 최진옥,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76.

99) 예를 들어 여자들에 대하여 '남자 자건거 뒤에 타지마라', '머리를 장발로 기르지 말고 귀밑까지 단정하게 잘라라', '화장을 진하게 하지마라' 등의 지시를 하달한다.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5),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다. 또한 사상교양은 정치이념, 역사관 등과 같은 합리적인 사고를 규제할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하는 각종 문예물과 매스미디어는 감성적인 사고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통제는 단순히 양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통제의 대상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사회통제 기제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상적 통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정치교양의 경우 사회주의교육체제에 의하여 탁아소에서 유치원 그리고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 이르는 정규 교과과정에 일관되게 구현되고 있다. 더욱이 유치원 높은반에서부터 고등중학교까지의 11년제 의무교육은 전국민이 일정 수준의 정치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만들고 있으며, 학교 교과내에서만 아니라 각종 과외활동도 교과 내 정치교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각종 기념비나 혁명사적지와 같은 정치적 상징물들은 교과과정과 과외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¹⁰⁰⁾ 문학예술 작품들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 교양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감상회의 소재가 됨으로써 학습과 조직생활과 연관된다. 이와 같이 사회의 하위체계간이나 각 사회통제의 기제간에 유기적 관계가 맺어지면서 사회통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여러 가지 사회통제기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기제들의 유기적 관계가 일사불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사회통제기제가 조직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정치적 집중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⁰¹⁾ 물론 중앙집권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인 것으로 북한의

100) 혁명유적지 등은 역사교육이나 정치교육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방학 때는 답사라는 과외활동의 무대가 된다.

101) 북한의 정치구조에서 중앙집권제에 대해서는 최진욱,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pp. 68~71 참조.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¹⁰²⁾ 그러나 정치적 집중제의 정도가 북한이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중앙집권제는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국가가 중앙집권적 지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핀다는 것이고, 국가의 활동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¹⁰³⁾

정치적 집중제가 각종 사회통제 기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면, 실제로 각 기체들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조건은 당적지도라고 할 수 있다. 당 우선 주의 역시 사회주의 국가 일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북한에서는 일선 행정조직까지 당이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¹⁰⁴⁾ 이것은 각종 사회통제 기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조직 집단 할 것 없이 모두 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치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작가들의 작가동맹이나 각종 언론매체, 그리고 물리적 억압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 인민무력성 그리고 사회조직과 직장과 인민반에 이르기까지 당을 대표하는 당원과 내부 당조직(최하 위에는 세포조직)을 통하여 당이 통제업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구조이다. 당적 지배가 유지되고 있는 한, 수많은 사회통제 기체들이 혼재하고 중첩적인 사회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각 기체간에 충돌이나 갈등이 생겨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직접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물리적 억압기구간의 분업화가

102) 중앙집권적 지도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하나의 의지로 집대성하고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지창익,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 「근로자」 592 (1991. 8), p. 7.

103)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 5. 5)," 「찬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52.

104) 강현수, "정치적 방법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기본요구," 「근로자」 570 (1989. 10), p. 54.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범죄를 포함한 각종 일탈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들인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검찰과 사법부는 체제유지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나 수행하는 각각 고유의 업무가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 담당하고 사회안전성은 일반 형사범들을 담당하고 사회이동을 통제한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체제이념과 같은 사상범을 담당하지만 당관계 인사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명목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의 지도를 추종한다. 형태적으로도 사법부는 물론 인민무력성과 국가안전보위부는 내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각각의 물리적 억압기구들이 담당하는 사회통제의 대상은 고유하지만 각 기관마다의 위계관계도 비교적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보위부는 사회안전성에 권리를 갖고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모든 국가안전보위부를 포함하여 모든 억압기구들은 당의 지도를 받고 있다.

여섯째, 사회통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처벌의 종류와 수준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경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단기 교양과 같은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노역봉사와 같은 사회적 명령, 그리고 감옥 수감에서 사형에 이르기까지 범법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 제재가 존재하고 있다.¹⁰⁵⁾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노동단련대', 집단 수용소 등에 수용되는 처벌도 있으며, 근대 산업사회이후 대부분의 사회에서 자취를 감춘 공개처형과 같은 자극적인 제재도 활용하고 있다.

105) 북한 형법에 제시되어 형벌은 다음과 같다. ① 사형 ② 노동교화형 ③ 선거권박탈형 ④ 재산몰수형 ⑤ 자격박탈 및 자격 정지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1987) 제21조. http://www.nis.go.kr/w0/libTemplate.sp_exeTemplate2?vc_menu_id=M03000000.

공식적인 제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평양과 같이 생활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추방하는 것도 처벌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⁰⁶⁾ 이 밖에도 배급제도를 활용한 제재가 있으며, 국가기구가 공식적으로 처벌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경우에도 각종 회의에서 자아비판이나 상호비판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비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제재 기제를 활용하고 있다.

2. 사회통제의 사회적 조건

북한의 사회통제가 효율이었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분단의 대결구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쟁의 경험은 북한체제의 사회통합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전쟁이 누가 일으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입은 전쟁 피해가 중요하다. 전쟁의 피해는 남북한에 모두 발생하였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되는 경향이 있다. 전쟁 피해 가운데 4천 억원으로 추정되는 물질 피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적 피해이다. 북한의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적게 보는 사람들도 사망인원이 인구의 10%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이 보는 사람은 25%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⁷⁾ 또한 전 산업시설이 파괴

106) 북한에서 평양주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회적 특권이다. 따라서 평양지역에서 추방한다는 것은 처벌의 의미가 적지 않다.

107) 유엔이 참가한 북한 인구조사에서 1949년에서 1953년 사이에 약 113만 가량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1949년 북한 인구의 12%에 달하는 숫자이다.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D.C.: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p. 52. 거기에서 그 사이의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사망자 수는 113만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자료를 보면 북한이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이 2백만 군인 5십만의 사망자를 내었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 인구의 25%에 달한다. Jon

될 정도로 물질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피해는 일반 주민들이 남한과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⁰⁸⁾

전쟁의 경험, 특히 가족구성원의 상실이라는 인적 피해의 경험은 전쟁을 직접 겪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이기보다 정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극복이 쉽지 않다. 특히 전쟁의 상대방이었던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일제시대의 경험과 어우러져 반제국주의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켰다. 더구나 북한 지배층은 정치적 필요성에서 전쟁 직후부터 반동분자들을 색출하여 극단적인 방법으로 공개처형하는 등 반제국주의적 정서를 강화시켰다. 이후에도 각종 스파이 사건들을 터뜨리고, 정치적 숙청을 반복하는 등 피해의식이나 공포의식을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추구하고 있는 체제를 일부라도 이해한다는 것은 이적행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다.¹⁰⁹⁾

전쟁의식의 지속은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1950년 이래 계속되었던 전쟁분위기는 북한에서 강력한 사회통제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환경이 되었다. 박헌영이 전쟁기간 중에 '미제의 간첩'으로 처형된 이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미제나 남한과의 연계되었다는 주장은 강력한 처벌을 무조건 정당화시켰다.

일상생활의 사회통제를 대변하는 차별화 된 계층정책의 정당성도 전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부역자에 해당하는

Halliday and Bruce Cumings, *Korea :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p. 202.

108) 강정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1), pp. 159~201.

109) 김병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사회통합적 성격에 관한 분석," 「일죽 김광수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숭실대 사회과학편」 23 (1993), p. 9.

‘치안대’ 출신을 계층 구조의 최하위 층에 놓고 월남자 가족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도 이들이 ‘적과 한편’이었기 때문에 당연시된다는 것이다.¹¹⁰⁾

전쟁 경험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양하여 사회통제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지만 이 외에도 한국전쟁은 북한 사회구조 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이 전쟁을 통하여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사망자나 실종자 그리고 부상자들로 인해 전쟁 미망인이 40만에 달하고 이산가족의 비율도 25%나 되는 등 전쟁이후 북한인구에서 결손가정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¹⁾ 기존 가족구조의 해체는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이념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었으며, 특히 아버지 없는 결손가정의 증가는 아이들이 정치사회적 ‘어버이’로서 김일성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이 전후복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후 사회주의 배급체제와 교육체제가 완비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이 가장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였다는 생각 즉,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 주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¹²⁾

전쟁이 초래한 또 다른 사회적 결과는 인구학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해방이후 전쟁이전까지 적지 않은 월남자가 있었으나 전쟁기간동안 적게는 60여만명에서 많게는 165만명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110) 북한에서 월남자에 대한 대우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해방이후 단독정부 수립이전 시기까지의 월남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수립이후 월남자 특히 전쟁과정의 월남자들에 대해서는 체제에 대한 배신자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가족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1) Hyo-Jae Lee, "Natalin Division and Family Problems," *Korea Journal* Vol. 25. (1985), No.8. pp. 4~18.

112) 북한에서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당의 품속에서 살면서 대학도 마치고 이렇게 성장한 내가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로동신문」(1993. 4. 28).

의 인구가 월남하였다.¹¹³⁾ 월남한 인구의 규모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월남이후의 결과이다. 월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체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월남하였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동기 못지 않게 전쟁의 고통스러운 경험, 그리고 복진하였던 UN군과 한국군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펼쳤던 적극적인 소개 작전과 월남 권유가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¹⁴⁾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이 월남동기가 북한체제, 특히 초기 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하였기 때문이라는 정치사상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던 것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월남자의 반수이상 이 북한체제에 대한 반대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
- 113) 전쟁이전 월남자에 대해서는 적게는 15만명 많게는 7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귀옥,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계 ‘용지농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9), p. 28; p. 49.
- 114) 전쟁 이후 정부기관이 월남자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않았고, 공산정권에 염증을 느끼고 ‘더 이상 공산치하에서의 생활을 포기하였다’거나 ‘자유의 천지에 대한 갈망 때문에 월남하였다’고 선전해왔다.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p. 308; 이북5도위원회 엮음, 「이북5도30년사」 (서울: 이북5도위원회, 1981), p. 75. 1985년의 조형·박명선의 조사에서는 월남동기가 정치사상적 이유라고 한 사람이 38.7%이고, 국군의 피난 권유와 징용 28.0%, 농지개혁 및 재산몰수가 19.0%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1997년의 이동원·조성남의 조사에서는 공산주의가 싫어서가 61.9%, 정치사상적 탄압이 25.1%, 재산몰수가 4.9%의 순으로 나타나 종교탄압을 포함하여 약 92%가 정치사상적 동기에 의한 월남이라고 응답하였다. 강정구는 월남 1세대와 2세대를 구별하여 조사하였는데 전쟁 1세대는 전쟁폭격을 피해서가 45.8%로 제일 많았고, 사회주의 정권이 싫어서가 41.7%, 재산을 몰수당하여서가 8.3%의 순서인 반면 2세대는 사회주의 정권이 싫어서가 46.7%, 전쟁폭격을 피해서가 38.3%, 재산을 몰수 당하여서가 11.7%로 1세대에 비하여 2세대가 월남동기로 정치사상적 이유를 더욱 많이 지적하였다. 김귀옥,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계 ‘용지농원’을 중심으로,” pp. 51~52. 그러나 김귀옥은 월남인 정착촌의 심층면접에서 전쟁경험과 연합군의 징용 및 소개 작전 그리고 복진기간 동안의 치안대 활동 등이 월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의 책, 4장 참조.

어떠한 이유에서 월남하였던지 북한에 잔류한 대부분이 북한체제에 동조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로서는 정치적 반대세력 혹은 잠재적 반대세력이 전쟁을 통하여 청산되었다는 점이고, 결과적으로 사회통제가 용이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쟁경험과 더불어 김일성 개인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정당성 부여도 사회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지지는 거의 절대적이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60~70% 이상이 김일성을 신봉하고 있으며 많게는 99%의 북한주민이 김일성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¹¹⁵⁾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업적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첫째, 항일운동을 주도하여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해방을 성취시켰으며, 둘째,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대결하여 승리하였고, 셋째,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이라는 강력한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쳤다는 점에서 김일성이 민족의 자존심을 살려놓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김일성이 노동자 농민과 동고동락하는 등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북한주민에서 신뢰감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¹⁶⁾ 최고지도자인 동시에 체제가 지향하는 유일지배체제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감은 사회통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 사회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전통문화의 적극적 활용도 일조를 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주장하였으나 '민족적 형

115) 김일성 숭배의 실례로 1990년 11월 강계시 폭파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의 70% 정도가 김일성 초상화를 메고 이동하였다고 한다.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87~88. .

116) 앞의 책, pp. 88~89.

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라는 원칙과 '민족문화에 대한 복고주의도 반대하지만 회의주의도 경계한다'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전통문화를 일정수준 유지하면서 정치사회화에 활용하였다.¹¹⁷⁾ 전통주의(traditionalism)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3세계 사회발전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주체'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주의를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¹⁸⁾ 예를 들어 '아버이 수령', '어머니 당'이라는 개념이나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는 구호는¹¹⁹⁾ 전통적인 가부장적 지배구조와 거의 완벽하게 부합된다. 또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승계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혈통을 강조하는 것도 혈연주의적인 전통가치관과 친화력이 있다.

전통주의 가운데 유교의 차별적 신분관은 통제정책가운데 사회계층정책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하였고,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수령 중심의 북한의 지배구조를 정당화는 동시에 물리적 사상적 통제를 일반주민들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문화적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전통적인 집단주의도 개인 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117) 김일성은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여야 하며 민족유산 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은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족유산을 잘 보존하여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들을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새 민주조선의 새문화를 건설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1949. 10. 15), 「김일성 저작집 5」(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 283.

118) 김병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사회통합적 성격에 관한 분석," p. 12.

119) "우리사회는 하나의 대가정이다," 「로동신문」(1993.2.1).

VI. 맺음말

북한의 사회통제체제는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작동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 그리고 인민무력성과 같이 물리적 억압기구만으로 사회통제를 한 것이 아니라 당과 사회조직 그리고 배급제도를 활용하는 사회적 통제 그리고 사상적 통제 등 다양한 통제기제를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각각의 사회통제 기제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회통제의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북한은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제가 효율적이었던 것은 다양한 사회통제 기제의 존재와 각 기제간의 유기적 연계작용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국전쟁의 경험은 북한주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을 고양하고 남한 및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 다양한 사회통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었으며,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지지도 사회통제의 권위를 제공하는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가 쇠퇴하고 이 결과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효율적인 사회통제체제도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북한의 사회통제가 효율적이었지만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일정한 일탈행위들이 존재하여왔고, 그러한 행위들은 북한이 식량난으로 대변되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량난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된 리더십의 약화도 일탈행위 증가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일탈행위의 증가가 현재 북한체제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

라도 그 원인이 구조적인 차원에 있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체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북한의 지배층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은 사회통제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이 사회통제에 직접 참여하는 등 물리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한편으로, 체제의 핵심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을 하고, 사회적 동요를 일으키는 집단이나 지역에 대한 사회통제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덕정치의 실현 등 사회계층정책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최근 추구하고 있는 사회통제체제의 변환은 일탈행위의 증가나 식량난으로 인하여 붕괴되는 배급체제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뜻 보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사회통제체제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통제체제의 변환, 통제정책의 변화가 사회발전이나 변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보다는 위기상황에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없이 통제정책의 변화가 강제된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사회통제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대증(對症)적인 차원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사회통제 기제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허물어질 수 있고, 특정한 일탈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통제 방식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종합적인 사회통제 능력은 저하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통제체제의 변화를 강요한 요인이 식량난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문제와 개인적인 수준의 일탈행위들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통제체제가 급격히 약화될 것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차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면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같은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제의 개혁 없이 대증치료적인 차원에서 사회

통제체제를 변혁하는 것만으로 각종 사회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장마당에 대한 과격한 통제가 주민들의 저항에 밀려 부분적인 허용으로 돌아간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산업화의 진전은 정보의 통제와 같은 폐쇄정책과 상관없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남한의 신세대에 해당하는 북한의 새세대도 이전 세대와 정치의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완벽하게 구축된 사회주의 교육체계에서 낳고 자라났음에도 사상적으로 동요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산업화에 따른 의식차이는 소설에서도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세대별로 작가의 취향이나 문제의식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설혹 북한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를 겪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기존 사회통제체제의 효율성은 저하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3세계 사회발전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대화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한 권위주의적 통치제도가 일정 단계에 이르러 한계에 직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위기가 사회체제의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사회통제를 강화하거나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회통제기제를 변혁하고자 한다면, 단기간의 사회통합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남한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IMF 위기도 경제적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통제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북한체제가 직면한 문제가 급격한 경제위기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북한의 획일화된 사회주의 통제정책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술적이고 기능적인 수준에서 사회통제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사회통제의 근본 방향과 목표를 재검토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광식 편저. 1987. 「북한의 실패: 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강정구. 1990.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 강철환·안혁. 1993. 「대왕의 제전 ①~③」. 서울: 향실.
- 고현욱 외. 1987.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국전쟁 상」.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김근식. 1986. 「형법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동규. 1990.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맥사.
- 김병로. 1994.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패」.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김재영 외. 1990.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서울: 형설출판사.
- 김학준. 1976. 「소련정치론」. 서울: 일지사.
- 남북문제연구소. 1994. 「교과서를 통해서 본 북한」.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 북한연구소. 1986. 「북쪽사회 어디에 와 있나」. 서울: 북한연구소.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1991. 「소련사회문화사전」. 서울: 을대학교 출판부.
- 심영희. 1988.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비판범죄론적 시각」. 서울: 한울아카데미.
- 안드레이 란코프. 1991. 「평양의 지붕밑: 소련 레닌그라드대 란코프교수의 북한생활체험기」. 서울: 연합통신.

- 안 혁. 1995. 「요덕 리스트」. 서울: 천지미디어.
- 이건중·이경렬. 1993.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북5도위원회 엮음. 1981. 「이북5도30년사」. 서울: 이북5도위원회.
- 이은죽. 1993.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 이우영. 199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이항구. 1988. 「분단 44년. 북한의 현실」. 서울: 신대양사.
- 최의철 외. 1999. 「북한 인권백서 1999」. 서울: 통일연구원.
- 최진욱. 1997.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공편. 1996. 「통일·북한 핸드북」.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Althusser, Louis. 1971.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London: NLB & Sheed & Ward.

Becker, Howard S. *Outsiders*. 1963. New York: Free Press.

Bloc, Albert A. and Geises, Gilber. 1970. *Man, Crime and Soceity*. 2nd ed. New York: Random House.

Cohen, Albert K. 1966. *Deviance and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Eberstad, Nicholas and Banister, Judith. 1990.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D.C.: U.S. Breau of the Census.

- Fredric, Carl J. and Brezinski, Zbigniew K. 1956.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eertz, Clifford. 1964. "Ideology and a Cultural System."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MacMillan.
- Hallida, Jon. and Cumings, Bruce. 1988. *Korea :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Books.
- Lemert, Edwin M. 1951.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New York: McGraw-Hill.
- Maretzki, Hans. 1991. *Kim-Ismus in Nord Korea*. 「병영국가북한」. 정경섭 옮김. 서울: 동아일보사.
- Pearce, G. 1976. *Crimes of the Powerful*. London: Pluto Press.
- Quinney, Richard. 1974. *Critique of Legal Order: Crime Control in Capitalist Society*. Boston: Little Brown.
- Wolfe, Alan. 1973. *The Seamy Side of Democracy: Repression in America*. New York: David Mckay.

2. 논문

- 강성윤. 1990.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서울: 을유문화사.
- 강정구. 1991.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 강현수. 1989. "정치적 방법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기본요구." 「근로자」 570 (1989. 10).
- 길태근. 1994. "북한의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구조에 대한 이론적 모델 구성." 「북한연구」 5권 2호 (1994 여름)
- 김귀옥. 1999.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덕. 1985. "정치사회화." 한국의국어대학교 소련문제연구소 편. 「소련정치과정」. 서울: 정음문화사.
- 김병로. 199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사회통합적 성격에 관한 분석." 「일죽 김광수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숭실대 사회과학편」 23 (1993).
- 김일성. 1980.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1949. 10. 15. 「김일성 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김일성. 1984.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1970.2.17.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2.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991. 5. 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도홍렬. 1990.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최명 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 은만금. 1992.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와 결과분석." 통일원.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 '92 북한·통일연구논문집. 5. 서울: 통일원.

- 조규화. 1985. "소련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한국의국어대학교소
 련문제연구소 편. 「소련정치과정」. 서울: 정음문화사.
- 지창익. 1991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사
 회의 본성적 요구." 「근로자」 592 (1991. 8).
- 최인섭. 1992.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예비적 고찰." 「형사정책연
 구」. 제3권 제1호 (1992 4).
- 허 숙. 1990. "북한의 취학전 및 초등교육." 황정규 외. 「북한교육
 조명」. 서울: 법문사.

- Althusser, Louis. 1971.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
 in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Ben Br
 tran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Lee, Hyo-Jae. 1985. "Natal Division and Family Pro
Korea Journal Vol. 25. No.8.
- Mills, C. Wright. 1975. "The Professional Ideology of
 Pathologists." in Stuart H. Traub and Craig B. Litt
The Theories of Deviance. Itasca, Illinois: F. E. Peac
 Sharlet, Robert. 1986. "Dissent and the 'Contra-system
 Soviet Union." 안택원 편저 「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Spitzer, Steven. 1975. "Toward a Marxism Theory of Dev
Social Problems. 22. 5
- Thio, Alex. 1975. "Class Bias in the Sociology of Devian
 Stuart H. Traub and Craig B. Little, eds. *The Theo
 Deviance*. Itasca. Illinois: F. E. Peacock.

- Traub, Stuart H and Little, Craig B. 1975. "Class And Political Bias in the Study of Deviance." in Stuart H. Traub and Craig B. Little. eds. *The Theories of Deviance*. Itasca, Illinois: F. E. Peacock.
- Young, Jock. 1976. "Foreword." to Pearce *Crimes of the Po* London: Pluto Press.

3.기 타

- 탈북자 김난준 증언. 월간조선 편집부 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서울: 조선일보사, 1991.
- 탈북자 김만철 증언. 월간조선 편집부 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서울: 조선일보사, 1991.
- 탈북자 김명섭·김영임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 1999. 2.
- 탈북자 김선일 증언. 월간조선 편집부 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서울: 조선일보사, 1991.
- 탈북자 김영림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0. 19.
- 탈북자 김영림·전혜숙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1. 22.
- 탈북자 박정철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0. 20.
- 탈북자 석명환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5. 20.
- 탈북자 유광일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0. 13.
- 탈북자 이용자·이명숙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 1998. 11.
- 탈북자 정범호 증언. 강광식 편저. 「북한의 실태: 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탈북자 정현수·서현자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 1999.

1.

탈북자 한태철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10. 15.

탈북자 한태철 증언. 통일연구원 면담, 1999. 5. 18.

“북. 재외공관 감사 군보위사령부 담당.” http://www1.yonhapnews.co.kr:81/cgi-bin/SRCH_KOR/Kor_Srch?TYPE=5&=0027&OFFSET=10472&FROMDATE=19990818.

“북한 형법” http://www.nis.go.kr/w0/libTemplate.sp_exeTemplate2?vc_menu_id=M03000000.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조직과 활동.” http://www1.yonhapnews.co.kr:81/cgi-bin/SRCH_KOR/Kor_Srch?TYPE=5&LINE=0045&OFFSET=10028&FROMDATE=19990731

“우리사회는 하나의 대가정이다.” 「로동신문」, 1993. 2. 1.

“인덕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주의 만세.” 「로동신문」, 1993. 1. 28.

“주민통제.”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8. 12.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1.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4.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5.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7. 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10. [http://www.nis.go.kr/
menu/m03000000/index_m03.html](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11. [http://www.nis.go.kr/
menu/m03000000/index_m03.html](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탈북자들의 북한 이야기". 1999. 12. [http://www.nis.go.kr/
menu/m03000000/index_m03.html](http://www.nis.go.kr/menu/m03000000/index_m03.html).

「내외통신」, 45권, 1992. 1. 31.

「로동신문」, 1985. 12. 18.

「로동신문」, 1993. 4. 28.

「북한사법제도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 6장 참조.

「북한연감 2000」, 서울: 연합뉴스, 1999.

「북한총람 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94.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중앙통신」, 1990. 2. 28.

*Current soviet Policies. II: The Documentary Record of th
Communist Party Congress.* Leo gruliow. ed. New
York: Praeger, 195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공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준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행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독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널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99-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	최수영	저	5,000원
99-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전현준·제성호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전현준·제성호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외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기타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人命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ku.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 이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인쇄/1999년 12월 26일

발행/1999년 12월 29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북한경제사회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 900-4300 (직통)901-2526 팩시밀리 901-2544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ISBN 89-87509-89-3

5,000원